

진보의 위기와 대안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 3 ~ 5 면

다시 듣는 맑시즘 2012
유로존의
위기와 미래

▶ 8 ~ 9 면

아랍 혁명
전진하는
이집트와 시리아 민중

▶ 10 ~ 11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갈수록 악화되는 '장기 불황'

▶ 5 면

독도 논란의 배경
중미 갈등과
동아시아 영토 분쟁

▶ 6 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34

Left21.com

제87호 | 2012년 8월 20일 ~ 9월 2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레프트21

독재 후에 비리 몸통 박근혜

지리멸렬 민주당을 넘어 진보 대안을 건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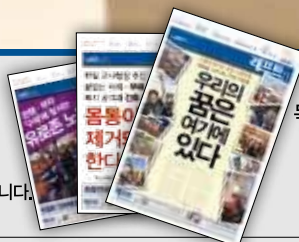
▶ 관련기사 2 · 3 면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박근혜 패퇴와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한 진보정치 연합체가 필요하다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8월 18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했고, 통합진보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을 넘어서 실질적 분당으로 나아가고 있다.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여러 불미스러운 과정을 거치며,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단결과 투쟁의 무기이기는커녕 골치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법안 하나 논평 하나 제대로 못 내는 식물정당 상태다. 에스제이엠과 만도 침탈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적 대응도 못하고 있다.

이런 공백을 민주당이 파고들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노동자들의 대변자인 양 하고 있다. 우파 지배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틈만 나면 종북 마녀사냥을 벌이며 진보진영을 탄압하고 있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운동의 정치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보정치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8월 말 정치파업 계획에도 찬물을 끼얹는 효과만 낳는다.

그래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내에서도 이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백가쟁명' 수준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통합진보당 구당권파로 대표되는 흐름, 신당권파의 진보정치혁신모임, 노동계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자는 흐름, 진보신당의 '진보좌파정당' 건설 프로젝트, 급진좌파들의 당 건설 추진 모임, 민주당의 '왼쪽 방'으로 가자는 흐름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사실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포기하고 민주당의 '왼쪽 방'으로 가자는 흐름은 진보진영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노동계급의 독자적 목소리가 사라지고 1퍼센트의 원팔과 오른팔만이 존재하는 미국식 정치 구조는 재앙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 대안체가 필요한가? 각각의 세력들이 각개약전하는 방식으로는 반세누리당 비민주당 진보정치대안을 대중적으로 건설하기 어렵다. 그래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하나의 전술로서 진보대연합을 제안한다. 유사민처럼 진보가 아니고 '민주당 왼쪽 날개도 대안일 수 있다'는 세력들을 빼고 급진좌파부터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진보적 NGO까지 광범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에서 진보진영에 끼어들어 온 참여당계는 이번 기회에 떨쳐내야 한다. 물론 참여당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당계 평당원까지 배제의 낙인을 찍자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나 피억압 사회집단에 속하며 진보진영으로 견인해야 마땅하다.

핵심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요직을 차지하고 각종 배신과 개악을 주도했던 유사민, 천호선 등 참여당계 리더들이다.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과 결과가 보여 주듯이, 이들의 참여는 진보대연합의 대의와 명분을 훼손하며 오히려 진보의 분열만 조장한다. 지금도 참여당계와 공동행보를 지속하려는 일부 진보 인사들의 태



올해 2월 5일 통합진보당 총선승리전진대회 진보의 정체성과 노동 중심성을 후퇴시키며 만든 통합진보당 실험은 파산했다. 친자본주의적 자유주의 세력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에 기반한 세력들이 진정한 진보대연합을 결성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도는 불신과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친자본주의적 자유주의 세력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에 기반한 다양한 세력과 정파, 단체 등이 폭넓게 합세해서 진정한 진보의 단결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진보진영 공동의 행동강령적 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연합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보편적 무상복지, 부자 증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핵발전 폐기 등이 그런 요구다.

통합진보당을 파산으로 몰아간 특정 세력의 민주주의 훼손과 패권주의를 방지하려면 진보대연합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은 가능한 느슨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진보진영의 각 세력과 정파들 사이에는 다양한 쟁점을 두고 정치적 이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와 조직 모두에서 매우 엄격한 동의 수준을 요구하는 당 모델보다는 각 정치 경향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을 보장하고, 이견에 대해서는 토론하면서도 단결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전선적 방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특정 정파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패권을 부리는 것을 제약하는 데 이로운 것이다. 혁명적 원칙을 가진 급진좌파도 독자적 선전·선동·조직과 행동을 보장받으며

여기에 참가할 수 있다. 정치 원칙이 다른 세력들이 한 구조물 안에서 숨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진보대연합체는 심화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지배자들의 고통전가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고무하는 중요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경제 위기 일수록 노동자들의 사기와 투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투쟁과 대안 제시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대선과 연립정부에 대한 입장

특히, 진보대연합체를 구성하면서 당장 다가오는 대선 국면에서부터 진보의 독자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말기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세력이 우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주당이 워낙 지리멸렬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백 덕분에 안철수가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대연합체는 독자 후보를 준비하고 출마시켜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나 안철수 등이 결코 온전히 대변할 수 없는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진보의 독자적 주장과 요구들을 선전·선동하며 대중을 결집시키며 박근혜에 맞설 뿐 아니라 민주당 등의 한계도 비판해야 한다.

물론 이 진보 독자 후보가 반드시 끝까지 완주한다고 못 박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의 집권 가능성에 대한 대중의 걱정과 반감이 강력한 상황에서 진보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해서 박근혜 당선에 도움을 줬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민주당과 안철수 등에 대한 분명한 비판을 하면서도 전술적으로 비판적 투표의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다.(예컨대, 지난 4월 프랑스 대선 때 좌파전선의 장뤼크 멜랑송은 1차 대선에서 좌파 후보로 출마해 급진적 선거 운동을

해 12퍼센트를 득표한 뒤 2차 결선에서는 사회당에게 비판적 투표를 했다. 결선투표라는 제도적 차이는 있지만 응용이 가능한 전술이다.)

그러나 이처럼 박근혜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가진 대중과 소용을 위해 불가피한 전술적 타협을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당과 연립정부에 대한 지지로 나아가선 결코 안 된다.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과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상 연립정부는 심증팔구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정부는 두 차례 집권 경험이 있고, 집권 직후부터 온갖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며 자신의 지지자들과 노동계급을 공격한 바 있다.

이런 민주당과의 연립정부에 진보진영이 참가한다면 발목이 잡혀 그 정부가

자기 지지 기반을 공격하는 것에 동참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연립정부를 같이 만들었으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개혁을 이룰 진정한 동력인 노동계급 투쟁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대연합체는 연립정부에 대한 반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이 폭넓게 단결하면서 '이명박근혜'에 맞서며 민주당과도 다른 급진적 주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진보대연합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온갖 악랄한 공격을 추진하는 지배자들에 맞서서 노동운동의 정치적 대응과 단결 투쟁 건설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폴라주 ⑧

이상동몽(異床同夢)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illusion

유시민처럼 진보가 아니고

'민주당 왼쪽 날개도 대안일 수

있다'는 세력들을 빼고

급진좌파부터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진보적

NGO까지 광범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진보의 정체성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최근 통합진보당의 위기 속에 십수 년 간을 공들여 쌓아 온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개혁 입법안 제출은커녕 중요한 여러 정치 쟁점에서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에게 있다. 구당권파는 선거 부정 사태를 둘러싸고 최소한의 쇄신마저 거부하며 진보정치의 혁신을 바라던 노동자·청년 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그런데도 구당권파는 이 사태를 성찰하기는커녕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구당권파를 옹호하는 글들을 모아 최근 출간된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이하 《진보의 블랙박스》)에서도 이런 태도가 나타나 있다.

물론 정부와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은 역겨운 일이고, 이런 탄압에 맞서 우리는 언제나 이들을 방어하며 싸워야 할 것이다. 《진보의 블랙박스》에서도 많은 필자들이 “종북” 마녀사냥을 비판하며, 이에 동조하거나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진중권 등의 지식인과 <한겨레>, <경향신문>과 같은 개혁주의 언론을 비판했는데, 이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럼에도 구당권파가 자신들이 마녀사냥당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만 이 사태를 해석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여러 세력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황을 해석했다. 우파들은 “종북”이 문제라며 마녀사냥에 이용했고, 일부 세력은 오히려 정의를 바로세우려 하기보다는 이 일을 자신들의 주도권 확대를 위해 활용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상황을 끼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정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었다. 진보정당에 어울리지 않는 선거 부정과 중앙위 폭력 사태 등을 보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란 많은 노동자·청년 들이 큰 환멸을 느낀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진보의 가치는 뒤편으로 둔 채 계급적 기반이 다른 참여당과 실용



민주당과의 연립정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던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의 종파적 패권주의가 진보적 정의와 단결의 블랙홀이 됐다.

적인 목적으로 무원칙한 통합을 한 것을 배경으로 벌어졌다.

과열된 국회의원 자리 다툼 속에서 곳곳에서 선거 부정이 벌어졌고, 격화된 당권 투쟁이 문제를 증폭시켰다.

이런 사태의 핵심 책임은 구당권파에게 있다. 구당권파는 진보의 분열을 일으키며 참여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인 당사자다.

구당권파는 참여당을 진보에 포함시키며 빨간칠을 해 주고, 민주노동당 강령을 후퇴시키며 진보의 원칙을 훼손해 왔다.

그런 기반 위에 최근 유시민은 민주당과의 통합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참여당이 통합진보정당에 합류한다면 자신의 왼쪽을 향해 우경화 압력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던 노동자연대다함께의 경고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최근 구당권파가 당을 ‘우경화’시키고 있다며 신당권파를 비판하는 것이 적반

하장으로 들리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정희 전 대표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반성하기는커녕 “통합정신 회복”을 말한다. “통합정신”이란 ‘국민 눈높이’와 ‘대중적 진보’를 말하며 강령을 후퇴시키고,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자기 최면

또 구당권파는 선거 부정을 전혀 인정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자신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진보의 블랙박스》에는 ‘참여당 계열 인사의 범죄와 음모 때문에 모든 사건이 벌어졌고, 구당권파는 아무 죄 없이 희생됐다’는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참여당 계열 후보였던 오목만 측에서도 조직적인 선거 부정을 저질렀고, 이에 연루된 사람이 진상조사위 일원이었던 점 등에 대해 신당권파 측이 철저하

게 규명하고 정화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은 문제다.

신당권파가 문제를 당내 주도권 장악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심지어 신당권파의 일부는 당권 투쟁에 눈이 멀어 조중동에게까지 당원 명부를 넘겼다. 그러나 상대의 약점을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대리투표와 무단으로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당권파 측이 관여한 선거 부정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구당권파 측은 자신들의 부정은 10~2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강변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10~20퍼센트를 부정이 아니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가 커진 진정한 원인은 다른 세력들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데 반해서 구당권파가 선거 부정 문제를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고 버티다 못해 중앙위까지 폭력적으로 무산시킨 데 있다.

그런데도 《진보의 블랙박스》는 중앙위 폭력 사태를 <부러진 화살>에서 석공을 쓴 교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정당방위로 묘사한다.

그러나 중앙위 폭력 사태는 구당권파가 패권을 고수하려고 운동 내 민주주의를 무시한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이었다. 잘못된 수단의 채택도 배제하지 않는 스탈린주의적인 실용주의 도덕관을 바탕으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다.

정부와 우파에게 종북 마녀사냥을 당해 왔다는 사실 때문에 구당권파의 잘못까지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진보의 블랙박스》에서는 이정희의 침묵을 그리스도의 희생에 비유하고, 구당권파를 이승만에게 친북 마녀사냥에 희생당한 조봉암에 비유하며 숭고한 희생자로 묘사한다.

정부의 탄압이라는 진실의 한 측면만을 부각하며 자기방어적인 논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만이 진보라는 종파성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구당권파는 “통합진보당 분당은 반노동자”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 동지들은 자신들이 불러일으킨 환멸 때문에 민주노동마저 지지를 철회한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또 이정희 전 대표는 ‘통합진보당으로 단결하지 않는 것은 분열이고 진보가 아니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쇄신도 거부하며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기며 분열을 불러 온 장본인이 바로 구당권파다. 게다가 이 말은 자신들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것만이 진보라는 심각한 종파성을 보여 준다.

구당권파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참여당과 통합과 ‘물지마 야권연대’를 추진하며 진보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정의·민주주의를 무시한 자신들의 태도가 얼마나 큰 문제를 낳고 있는지 봐야 한다.

구당권파가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 정당화에 빠져 있을수록 그들이 말하는 진보의 단결은 더 힘들어질 뿐이다.

정선영

진보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계급 단결의 정치를 추구해야

통합진보당 위기 속에서 진보신당의 주요 활동가들도 통합진보당 위기를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대안들을 내놓으려 하고 있다. 홍세화 대표와 장석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한 글 모음집 《지금 여기의 진보》도 그런 시도의 일부다.

여기서 홍세화 대표는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 실패한 자유주의 정권의 복권을 위해 좌파 정치-운동을 ‘실체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려는 이 시도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물지마 야권연대’와 연립정부 노선을 비판한다.

홍세화 대표는 다른 글에서 “시아를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하면 할수록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 경계는 흐려질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비판의 대상에는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른바 신당권파의 주축인 심상정, 노회찬 등 옛 진보신당 지도자들도 포함될 것이다.

이들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다는 이유로 무원칙한 통합에 함께했고, 통합진보당 분열이 기정사실화가 된 지금도

참여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유시민 등 옛 참여당 지도자들과 공동 행보를 취하며 분명히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도 <레디앙>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진정한 하나가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무원칙한 통합이 낳은 갈등을 꼬집었다.

그래서 홍세화 대표가 진보의 독자 대선 후보를 세우려고 제안한 ‘좌파연대 2012 대선운동’에는 타당성이 있다.

특히, 최근 정치 상황을 보면 선거에서 진보가 독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박근혜가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위기 조짐이 커지면서 고통전가에 맞설 대안이 필요한 때다.

그러므로 대선에서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진보적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필요한 과제다. 그러려면 행동강령적 요구를 중심으로 최대한 개방적으로 결속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점에서 장석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제시하는 ‘기본소득, 노동시간

의 획기적 단축, 화석·핵 에너지 전면 탈피’ 등은 진보가 단결해서 추구할 만한 괜찮은 행장강령적 요구가 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진보신당 지도자들이 여전히 진보진영의 폭넓은 단결에는 시큰둥하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통합해도 참여당 끌어들이기를 막을 수 없다’며 진보대통합을 거부한 바 있다. 사실 주된 이유는 ‘종북과 패권’ 때문에 자주파와는 함께하기 싫다는 것이었다.

지지 기반

이런 태도는 이번 통합진보당의 위기를 보면서 더 강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자주파 지도부의 사상과 문제점만이 아니라 기층 지지 기반을 볼 필요가 있고, 단결과 공동 행동 속에서 대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들이 개입해 사태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었던 기회를 차 버리고선,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사후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진보진영 단결에 대한 진보신당 리더들의 부정적 태도는 이들이 “조직 노

동’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태도와 관계가 있다. 진보신당 창당파들은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 “민주노동당에서 탈피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홍세화 대표는 심지어 《지금 여기의 진보》에서 자본이 노동자들을 “포섭과 배제”로 분열시켰는데,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정규직 노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포함된 자들’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장석준 의장도 “현실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력 ‘때문에’ … 그 수인(囚人)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들 생활 수준이 올라가서 체제에 안주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런 진단의 결론은 “불안정한 보조직, 기간직, 구 기술의 노동직, 대체직, 파트타임 직을 수행하는, 지위와 계급 없는 사람들[에게] 노동 운동의 미래가 …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제된 노동”이란 존재 조건만으로 급진성이 보장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 못 한 대학생이 정규직 노조 파업을 위한 폭력에 용역으로 동원되는 현실을 보라.

정부와 기업주의 반노동 테러 공세에

고통 당하며 저항했던 쌍용차, 한진중공업, 유성, KEC, 에스케이엠 등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섭된 노동”으로 부를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자본주의의 패악을 끝장내려면 노동계급의 힘에 기대야 한다. **자본 권력의 원천인 이윤 창출을 봉쇄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이야말로 진보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따라서 좌파는 “조직 노동”과 “배제된 노동”을 구분하는 태도가 아니라, “조직 노동”이 그 힘을 “배제된 노동”과의 단결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로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좌파는 “조직 노동”을 중심으로 진보정치가 재편돼 광범한 연합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이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진정으로 연립정부 노선이 진보 운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면, 진보정치 세력과 노동운동의 단결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계급연합 노선과 싸워야 한다.

김문성



2007년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탄압해 온 민주당의 왼쪽 날개가 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민주당의 왼쪽 날개’가 대안이라는 허튼 소리

통합진보당의 분열 속에서 진보진영 일각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아니라 민주당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대표는 “민주당의 왼쪽 날개가 된다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했다.

유 전 대표는 “욕하고 비판하고 소리 지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기층 투쟁의 의의를 폄하하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

김기원 교수(이하 경어 생략)가 최근에 출판한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는 이런 ‘민주당 왼쪽 날개’론의 문제의식을 아주 잘 보여 준다.

김기원은 “재벌, 보수·수구언론, 검찰, 관료의 과두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진보·개혁·평화’를 지향하는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유시민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 특히 김기원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서 영동한 교훈을 끌어낸다.

김기원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수구적 보수세력과 노정권이 격돌할 때에는 노정권 쪽에 힘을 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진보진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김기원은 노무현 정부가 “자기편을 축소·악화시키고 반대편을 확대·강화”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한다.

노무현 정부가 개혁과 진보의 약속을 어기고 기득권 세력에 굴복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배신자

김기원은 노무현 정부의 이런 오류가 “좌파의 심각한 권력투쟁에 직면해 있다는 의식이 부족해 싸움의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수립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행정관료 또는 관료화된 참모들에 의해 맥을 못 추게 된 것” 때문이라고 변명해 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진보적 대중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며 그 운동에 힘을 실어 보수적 관료층에 대항하려 하기보다 보수적 관료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며 진보·노동운동을 공격했다.

이 때문에 이정우·정태인 같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김현종 같은 보수적 관료에 의지해 한미FTA를 밀어붙이기까지 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처럼 의식적으로 보수세력과 똑같은 정책을 채택한 것은 전략·전술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1퍼센트 세력에 기반해서 한국 자본주의의 성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같은 보수세력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기원도 지적하듯이 노무현의 원팔이라는 “이광재는 삼성과의 유착 문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었”고, 이를 입증하듯이 노무현 정부 시절은 “삼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국정이 굴러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런 기반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은 한미FTA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 논리가 과장돼 있다”며 한미FTA 반대 운동을 평가절하 했고, 유시민의 참여당은 “한미FTA 원안 찬성”이라는 입장을 반복한 점이 없다.

시장의 효율성?

김기원이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이런 차이를 애써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가 이윤 논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김기원은 ‘희망버스’ 운동을 비난한 바 있다. “정리해고는 창조적 파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정리해고가 없을 수 없”는데, 희망버스 운동은 바로 정리해고 철폐라는 잘못된 목표를 지향했다는 것이다.

진보적 대중의 개혁 염원을 달성하려면 민주당의 왼쪽 날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독립된 진보진영의 세력을 결집시켜 그 목소리를 높이고 진보적 노동자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게다가 김기원은 “정규직의 경직성과 부분별한 비정규직 확대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며, 정규직의 고용안정성도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기원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포기하라며 복지 강화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기원이 맹신하는 ‘시장의 효율성’이 바로 복지 확대에 반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수세력뿐 아니라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고 말한 노무현도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빼앗아 나눠 준다고 하면 큰 코 다친다”며 복지 확대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반대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유시민의 참여당도 진보진영이 추진해 온 무상의료, 무상교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 등에 대해 “엄청난 재정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었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자신의 작업장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강행할 뿐 아니라 복지 확대에도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집권하면서 이 같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온갖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자신의 지지자들과 노동계급을 공격한 바 있다. 바로 이 점이 10년 만에 우파 정부가 반사이익을 통해 재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보세력이 민주당과 전략적 제휴를 해 그 왼쪽 날개로 들어가거나 그들과 연립정부를 추진한다면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자기 지지 기반을 공격하는 것에 동참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진보적 대중의 개혁 염원을 달성하려면 민주당의 왼쪽 날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독립된 진보진영의 세력을 결집시켜 그 목소리를 높이고 진보적 노동자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집한 진보진영은 반자본주의적 지향을 분명히 해야만 경제 위기 시기에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동훈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갈수록 악화되는 ‘장기 불황’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오늘날 불황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예전의 불황과 뚜렷이 다르다고 말한다.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흥청망청 즐겨라. 곧이어 최악의 세계경제 전망이라는 숙취가 찾아올 것이다.” 나는 보통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트위터에 쓴 말은 정확하다.

세계 경제·금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2007년 8월 9일 신용경색이 발생해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은행들에게 7백50억 유로를 지원해야 했다.

그 뒤로 5년이 흘렀지만 ECB는 여전히 화제의 중심이다. 몇 주 전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ECB는 유로존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장은 들켰다. 시장은 드라기의 발언을 ECB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사들이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시장이 이들 나라의 부채 상환 능력을 의심하면서 이들 나라 정부들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경충 뛰어 왔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 초기 단계에서 ECB가 유로존 정부 국채를 사들였을 때 독일 정부와 중앙은행인 분데스뱅크는 그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들은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독일 식 자본주의 모델 —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것 — 을 악화시키는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분데스뱅크가 껴들어서 드라기에게 추가로 국채를 사들이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드라기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후퇴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ECB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의 국채를 사들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조차 유럽금융안정기금(EFSF)과 긴축 계획을 협의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유로존 위기라는 지겹고 끝날 줄 모르는 드라마의 최근 일화는 그리스와 포르투갈과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위기가 어떻게 훨씬 더 큰 나라로 발전했는지, 또 유로존 지배자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이란 것이 긴축밖에 없음을 잘 보여 준다.

봉쇄된 공황

드라기의 태도에 대한 관심은 유로존 위기의 중요한 특징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레비는 유로존 위기를 “봉쇄된 공황”이라고 불렀다. 경제의 완전한 붕괴가 방지된 이유는 ECB와 다른 중앙은행들의 개입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개입했지만 상황은 아주 나쁘다. 마르크스주의 블로거 마이클 로버츠는 정통경제학자 존 테일러의 계산 결과를 인용했다. 테일러는 미국에서 2008년 불황으로부터의 회복 과정을 “기껏해야 명목상의 회복”으로 규정했다. 테일러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 불황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것이다. 이번 불황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비극이다.”

불황에 빠지면 경제는 보통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한다. 그러나 회복 과정에서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불황 때 발생한 생산량 손실을 벌충하며, 경제는 다시 정상적 성장 궤도에 들어서게 된다.

이번 패턴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영국의 경험에 기초를 두고 마르크스는 1859년에 그것을 ‘법칙’으로 규정했다. 즉, 심지어 위기의 시기에도 “나라의 생산력과 세계시장의 흡수력”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런 능력이 최고지점에서 후퇴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몇 해에 걸쳐 약간의 변동을 겪은 후에는 한 시기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 규모가 다음 시기 생산 규모의 시작점이 된다.”

현 위기의 경우 이 ‘법칙’은 깨졌다. 테일러는 미국의 현재 실질 국내생산이 여전히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음을 보여 줬다.

이것은 흔히 금융 위기에 의해 촉발된 위기가 심각한 불황으로 이어지곤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예전 불황들과 크게 다른 점이다.

마이클 로버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장기 불황에 빠져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2315호 / 번역 김용욱

이명박이 독도로 간 까닭은

김영익

이명박이 8월 10일 한국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면서, 그동안 화기에애하던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가 급속히 냉랭해졌다. 이후에도 이명박은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이명박의 급작스런 ‘변신’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그는 “뻣속까지 친미·친일”인 자고, 무엇보다 최근까지 한일군사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해 온 당사자였으니 말이다. 이명박은 집권 초기에 “일본에게 만날 사과하라고만 요구하지 않겠다”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침묵하기도 했다.

독도 문제에서도 이명박은 ‘일본 프렌들리’의 모습을 보여 줬, 일본 우익에게 자신감을 줬다. 2008년 당시 주일대사권철현은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속박당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아”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가슴에 묻어두고” 주일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이 문제들을 삭제해 파문이 일었다.

따라서 최근 이명박의 대일 강경 행보는 각종 부정부패와 민심 이반으로 흔들리는 정권의 위기를 ‘깜짝쇼’로 수습하려는 교육지책의 측면이 강해 보인다. 이명박의 지지율은 18퍼센트까지 추락해, 사실상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할 지경이다.

좌충우돌

또한 한국의 역대 정권들이 일본 과거사·독도 문제 등에서 보여 온 좌충우돌의 패턴을 이명박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대일 관계에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으나, 나중에 일본에게 뒷통수를 얻어 맞고 ‘강경대응 쇼’로 잠시 선회하곤 했다.

일본 정부는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잠시 기다려 달라”고 애걸했는데도, 2008년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식으로 뒷통수를 쳤다. 최근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는 와중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독도 방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지배자들은 독도 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지배자들의 대외 전략과 깊이 연관돼 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지만, 이를 궁극적으로 보장해 줄 군사력은 여전히 평화헌법 체제에 묶여 있다. 그래서 일본 우익은 독도 문제를 평화헌법 개정, 군비 증강, 해외 파병 등 군사대국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 왔다.

게다가 1990년대 이래 일본 자본주의는 위기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2대 경제 대국이 되는 등 동아시아의 질서가 크게 변했다. 이에 일본 지배자들은 위기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는 일본 지배자들이 국내외적으로 떨어진 위신을 만회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쟁점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명박을 비롯한 한국 지배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제대로 맞설 수 있을까. 한국 지배자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1960년대 박정희가 독도 문제로 너무 골치 아픈 나머지 “독도를 폭파해 버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을 만큼, 이 문제는 한국 지배자들이 다루기 매우 어려운 딜레마다.

딜레마

한국 자본주의가 군사적으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큰 틀 속에 지내 왔고, 경제적으로도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로 수십 년 동안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에서 돈과 기계를 들여와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했고, 일본의 투자는 한국 자본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미국 제국주의 하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고, 미국 지배자들은 한국과 일본 등을 하나로 묶어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놓고 터지는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미국 지배자들에게 악재다.

이 때문에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같은 자가 “한국과 일본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수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며 갈등의 봉합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국 지배자들이 미국의 이런 압력을 거스르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국 민중은 과거 식민지 시절의 아픔을 생각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격하게 분노해 왔다. 한국 지배자들로서는 이 정서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 지배자들은 국내 여론을 의식해,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말하면서도 일본이 과거사와 독



8월 10일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한국 지배자들이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한, 이명박의 ‘독도 지키기’는 ‘깜짝 쇼’에 그칠 것이다.

도 문제 등에서 양보를 해 주기를 바라왔다. 하지만 이는 일본 지배자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이명박 정권도 한국의 역대 정권들이 처한 이 딜레마로부터 자유로울 리 없다. 따라서 이명박의 대일 강경 행보는 오래가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의 무능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이명박을 압박하고 있고, 국내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마저 이명박에게 등을 돌렸다.

중미 갈등으로 격화하는 동아시아 ‘섬 전쟁’

독도는 동아시아에서 분쟁이 격화하는 여러 지역 중에 하나일 뿐이다. 홍콩에서 출발한 중국 시위대가 8월 15일 일본 순시선의 저지를 뚫고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에 상륙했다. 이들은 오성홍기를 펼치며 다오위다오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일본 정부 간에 험악한 말들이 오간 것은 물론이다.

이 사건이 보여 주듯이,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난사 군도)와 파라셀(시사 군도), 센카쿠 열도 등에서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이 무력 행사도 불사하며 첨예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벌써 이명박 정권은 “일본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꼬리를 내리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독도를 강탈했다. 지금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적 야심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일본에 뒤지지 않게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식으로는 일본의 야심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조처는 동아시아에서 군비 증강 경쟁을 부추기고 불안정만 더 키

울 뿐이다. <한겨레>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용한 외교’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못 본 체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독도 문제의 진정한 대안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제국주의적 갈등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 건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민중이 진정으로 손 잡아야 할 대상은 국내 지배자들이 아니라, 반핵 시위와 군사대국화 반대 운동 등 일본 지배자들에 맞서고 있는 일본 민중이어야 한다.

이것이 중국 지배자들을 긴장케 해, 중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지배자들도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 중국 지배자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지다가 국지적 충돌로 발전하거나, 더 큰 재앙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독도 문제를 포함한 오늘날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하는 근본 원인인 제국주의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에 함께 맞서자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공동소집자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잇달아 이주노동자를 공격하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을 옮길 권리를 사실상 박탈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을 세 번 할 수 있었고, 이때 노동부가 알선한 사업장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방적으로 사업주들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3개월 내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비자가 취소되므로 시일에 쫓겨 아무 곳이나 취업해야 한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조건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불가피하게 미등록 체류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법무부는 또 이주노동자들을 사실상 범죄와 질병의 온상으로 지목했다. 법무부는 8월부터 아시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강화 조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서 박사 학위 소지자나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는 예외다.

‘범죄와 질병의 온상’이라는 낙인

사실 정부는 그동안에도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입국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했다. 이주노조 전 위원장 미셀 동지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검사로서 임신 테스트, 에이즈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가 점점 조

화·홍포화’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점점 커진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시한 근거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범죄 위험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피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근거가 유일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피의자’들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2008년 전국에서 외국인 범죄 전담반이 꾸려졌지만, 외국인 범죄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도 아니다. 여전히 외국인 범죄율이 한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율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경찰과 출입국의 ‘조직적이고 홍포화된’ 검문 검색, 습격이 강화돼 이주민들에 대한 억압

은 강화됐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 등 감염병 우려 운운하는 것도 헛소리다. 질병관리본부는 후진국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가 결핵 발병률을 높인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과로가 증가해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와 사회 양극화 속에서 빈곤의 심화 같은 환경이 진정한 문제인 것이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특히 마약, 정신질환 검사 강화를 추진하는데, 10년 전 경찰이 한국말에 서툰 네팔 여성 찬드라 씨를 행령병자로 몰아 6년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면, 이제는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어 억울하게 추방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생겨날 판이다.

결국 최근 노동부와 법무부가 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이주노동자를 ‘일자리 도둑’, ‘잠재적 범죄자’, ‘질병을 퍼뜨리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을 찍어 인종차별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심화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반이주민 정책을 통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점증하는 불만의 진정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을 속죄양으로 삼으려 한다.

이 부당한 공격에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부의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각계의 진보 인사 1천5백 명이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도 발표했다. 8월 19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 아산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집회를 개최한다.

누더기 주간연속2교대제, 문지마 불법파견에 맞서

현대차 원·하청 연대 파업을 지속·확대하자

현대차에서 사측과 노동자들의 쟁투가 계속되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휴가 직후부터 8월 17일까지 시한부 파업을 지속했다.

그런데도 사측은 누더기 주간연속2교대제안과 비정규직안을 내놔고,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그 불만을 잠재우려는 듯하다.

보수언론은 사측의 제시안을 “파격적”이라고 과장 보도했지만, 이는 지난해 5.4퍼센트 임금 인상률보다도 낮다. 지난해보다 성과급과 격려금 총액도 적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을 뿐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자산이 무려 1백10.3퍼센트 증가해 1백90조 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고작 5.3퍼센트 임금 인상이 파격이라니, 그런 주장 자체가 “파격적”일 뿐이다.

사측은 지난 수년간 기본급은 절끔 올리고 성과급과 주식 배당 등으로 생색을 내면서, 주간2교대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같은 중요한 요구들을 묵살해 왔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심야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따라서 올해 현대차지부가 “3년 무쟁의”를 깨고 싸움에 나선 만큼, 또다시 피죄죄한 미끼로 투쟁을 제어하려는 사측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임금뿐 아니라 주간2교대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투쟁을 지속·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실리’를 보장할 수 있다.

누더기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가 올해 싸움을 시작하면서 ‘임금 감소,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 없는 8+8 근무형태 연내 실현’을 요구로 확정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런 노동자들의 오랜 열망을 무시하며, 오로지 “생산량 맞추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임금을 보전하려면 생산량을 맞춰야 한다’면서, 8+9, 노동강도 강화, 추가 노동시간 1백89.5시간 확보 등 사실상 주간2교대를 누더기로 만들려는 것이다. 게다가 이조차도 시행 시기를 늦추려 안달이다.

그런데도 박태주 교수가 이끄는 노사자문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양보를 조언하는 것은 분노할 일이다. 자문위는 전임 이경훈 집행부가 사측과 합의하려다 조합원들에게 불신 받은 안을 재탕해 내놔다. 그래서 사측은 이를 만족해 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기가까지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양보하고 후퇴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은 “사측안대로라면 총회에서 부결될



7월 21일 원·하청 연대 투쟁 한마당 원·하청 노동자들이 단결해 사측을 압박해야 진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지부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소식지가 아무 비판도 없이 8면에 걸쳐 자문위 견해를 소개하며 은근히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지부 쟁대위는 지금 수준에서 타결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다시한 번 대의원대회 요구를 분명히 내세워야 한다.

불법파견

한편,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망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선별적인 신규채용 방식으로 2016년까지 3천 명을 정규직화하고, 공정 재배치를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인 ‘불법파견 정규직화’ 내용은 쏙 빼놓고 말이다. 이것은 매우 기만적인 안이다.

무엇보다 정규직·비정규직 공정 분리로 불법파견을 ‘적법’하게 영구히 하려는 것이다. 2016년까지 정년 퇴직으로 인한 정규직 자연 감소분 3천여 명만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빈자리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워 위험도 있다.

더구나 정규직 자연 감소분을 비정규직으로 메우는 것은 이미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에도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늘렸다.

게다가 ‘2016년까지 단계적 신규채용’조차 신뢰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사측은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하며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또 사측은 “당사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결국 사측에 순응하며 노조 활동을 안 한 사람만 골라내겠다는 뜻이다.

이런 모든 점들 때문에 정규직지부는 사측안을 비판했고, 비정규직지회는 거부하고 투쟁에 나섰다.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안에 맞서 8월 16일과 17일 ‘전면 파업’을 선언하고 현대차 본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했다. 이런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은 정당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미 8월 14일에도 원·하청 교차 파업을 벌였고, 이날 정규직지부의 방여와 활동가들의 지지·연대 속에서 울산 1공장에서 주·야간에

라인을 멈추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생산을 멈추면서 사측에게 ‘불법파견 정규직화’ 수용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이 파업에 참가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라인을 1시간 37분 세웠다!”, “야간조 정규직 대의원들도 함께할 줄 몰랐다. 힘이 났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월 16일과 17일에는 정규직지부의 방여 지침이 나오지 않아, 파업이 생산에 타격을 주지 못했다. 이를 보고 일부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정규직지부 지도부에 우려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단결

이런 우려를 말끔히 떨어내려면, 우선 정규직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고, 지부의 투쟁도 지속해야 한다. 우리의 비정규직 동료들은 지금 사측의 납치와 폭력 만행까지 당하고 있다.

동시에,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지부와 조합원들에게 사측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며 단결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8월 14일

처럼 공동으로 싸우는 것이 사측에 맞서 효과적으로 투쟁하는 전술일 것이다. 이것은 사측이 노라는 분열에 맞서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측이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 투쟁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

지부는 지금껏 싸워 왔지만, 아직 힘을 다 사용한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측은 재고 물량으로 버티고 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현대차에 재고 비상이 걸렸다.”

사측이 숨 돌릴 틈을 주지 말고 밀어붙여야 한다. 시한부 파업뿐 아니라 쟁대위가 이미 사측에 경고한 것처럼 전면 파업으로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파업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올해 노동자 투쟁에 중요한 축이다. 이 투쟁이 승리하는 것은 다른 작업장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고, 급속노조를 겨냥한 만도와 에스제이엠 공격에 맞선 효과적인 반격이 될 것이다.

허수영 노동자연대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에스제이엠 노동자들에 대한 남아공 급속노조의 국제 연대

“우리는 노동자들의 피문은 부품을 쓸 수 없다”



노동자들을 “죽도록” 팬 한국 정부·자본의 만행은 국경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급속노조가 에스제이엠 노동자들에게 강력히 연대할 것을 밝히며 국제 연대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아래는 남아공 급속노조의 메시지를 축약한 것이다.

남아공의 그 어떤 자동차 운전자들도 노동자들의 피로 만들어진 차를 운전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노동자들을 비인간적으로 폭행하는 기업을 용납할 수 없다.

남아공에서는 세 개의 완성차 기업이 에스제이엠으로부터 납품을 받는다. 현대, GM, 포드가 그들이다.

우리는 남아공의 GM과 포드에서 에

스제이엠 부품을 근절시키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하고 있다.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연대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찌 남아공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싸울 수 있겠는가?

남아공급속노조는 남아공 에스제이엠에게 한국으로부터 남아공 대체 노동자들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 남아공 에스제이엠은 어떻게 해서 남아공 노동자들이 한국에 발령돼 노동권을 훼손시키게 만드는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에게 명백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공 노동자 철수를 위한 파업뿐이다.

우리는 에스제이엠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기업 CEO들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이들 기업들에게 우리는 한국으로 간 남아공 노동자들을 철수시키도록 남아공 에스제이엠을 함께 설득해야 함을 밝혔으며, 이들 노동자들을 국경을 건너 파업 파괴자로 파견한 행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만약 남아공 에스제이엠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거나 한국 에스제이엠이 신속히 파업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남아공 급속노조는 남아공노동조합총연맹(COSATU, 코사투)과 산업계 모두에게 에스제이엠을 세계 최악의 사용자 목록에 올리도록 요구할 것이다.



사진 출처: George Oros (위키미디아)

지난해 6월 벌어진 그리스 총파업 그리스 민중의 긴축 거부 투쟁은 전 유럽적 저항을 촉발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다시 듣는 맑시즘2012MARXISM ①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활동가인 소티리스 콘토아니스가 지난 7월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 2012’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콘토아니스가 7월 27일에 강연한 ‘유럽연합과 유로의 미래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녹취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본질과 구실, 저항의 과제에 관한 분석은 심화하는 유럽 경제 위기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기원은 19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에는 유럽연합이 아니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범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일종의 자유무역 지역로 철강과 석탄만을 취급했다. 당시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렇게 6개국뿐이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창립 문건은 당시 프랑스 외무부 장관 이통을 따서 수반 선언이라고 불렸다. 수방 선언은 이 자유무역연합이 마치 평화를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처럼 포장했다.

수방은 “세계평화를 달성하려면 그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에 상응하는 만큼의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석탄철강공동체는 사실 평화와는 전혀 무관했다. 오히려 유럽연합은 언제나 제국주의적 기관이었다.

수방이 평화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석탄과 철강 산업을 지목한 것은 일리가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을 보더라도 영국, 독일, 프랑스의 석탄·철강 기업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철도노선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1차 대전 발발에 상당한 큰 구실을 했다.

그러나 석탄과 철강 기업주들은 경쟁을 중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에 맞서서 좀더 든든한 국가 연합의 힘을 빌리고자 유럽석탄철강연합을 만들었다. 결국 유럽석탄철강연합은 서방의 병전 동맹의 일부본이었다. 그래서 유럽석탄철강연합도, 또 그것을 1950년대 말에 계승했던 유럽공동체(ECO)도 미국의 지지와 후원을 등에 업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미국과 EC 간에 어떤 갈등이나 경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는 단지 강력한 국가가 약소국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

라 국가들 간의 위계질서를 말한다. 그 위계질서 내에서는 한편으로 갈등과 반목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조와 협력도 있다. 그래서 EC와 미국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EC 내에서도 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전리품’ 쟁기기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옛 소련이 패망하자 EC는 유럽연합으로 이름을 바꿨다. 냉전이 끝나자 서방 강대국들은 옛 동구권을 약탈하고 산산조각 내서 각자 전리품을 챙길 기회를 맞았다. 유럽연합이 창설된 것은 주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였다. 1990년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다. 2004년에는 옛 소련 위성국 8개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했고, 3년 뒤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도 합류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나토(북대서양조약

기구)도, 전쟁도 함께 확대됐다. 예컨대 유고슬로비아는 7년간 끔찍한 내전을 겪었더니, 이 내전은 결국 나토 군의 폭격으로 막을 내렸다. 요컨대 유럽연합은 국기도 아니고 나프타(NAFTA) 같은 무역블록도 아니다. 그것은 약탈하고 호전적이며 피로 일룩진 제국주의적 연합이다.

유럽연합은 시장근본주의와 극단적 신자유주의의 보루이기도 하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국들은 추축국들을 상대로만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국 노동계급에게도 전쟁을 선포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였다.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 시대에 유럽연합도 회원국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다. 2004년에는 옛 소련 위성국 8개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했고, 3년 뒤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도 합류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나토(북대서양조약

것은 복지국가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다.

이런 공격적인 신자유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바로 유로화다. 2002년에 도입된 유로화는 유럽 지배자들이 시도한 가장 야심차고 공격적인 프로젝트였다. 유로화는 도입한 주된 목적은 세계시장에서 달러화와 경쟁할 수 있는 기축 통화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달러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서방 세계에서 사실상의 기축 통화로 떠올랐다. 미국 지배계급에게 이는 대단한 이점이었다. 해외에서 뽀개를 수입할 때 돈이 부족하면 달러를 찍어 내기만 하면 됐으니 말이다. 마치 매장량이 무한한 금광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그런 금광이 있다 해도 아무 때나 금을 캐내서는 곤란하다. 금을 너무 많이 파내면 국제시장에서 금값이 폭락해서 결국 가치가 없어질 테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맑시즘 2012에서 연설하는 소티리스 콘토아니스

로, 달러화가 바로 다음 날 평가절하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 세계의 어떤 중앙은행도 달러화로 외환보유고를 비축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통화가 기축 통화 구실을 할 수 있으려면 그 통화의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여차하면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달러화의 가치를 보장할 수가 있다. 요컨대 어떤 나라가 달러화의 가치를 위협하는 것을 한다면 미국은 그 나라를 폭격할 수 있다.

반면 군사력으로 미국을 따라가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유럽연합은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에 의존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존재 목적도 유로화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뿐이다. ECB는 정부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구실은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나 정부가 다른 어디서도 돈을 조달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대부자 기능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FRB)은 돈을 찍어내서 그 돈으로 정부의 국채를 사들이는 식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운다.

반면 ECB는 국제 매입 권한이 없다. ECB는 단지 민간은행들한테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런데 민간은행은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유럽의 민간은행들은 엄청난 이윤을 누렸다. 그들은 ECB로부터 1퍼센트의 금리로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국채를 사들였다. 그런데 스페인 국채는 수익률(금리)이 7.5퍼센트, 이탈리아는 6퍼센트, 그리스의 경우 25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금리 차이를 이익으로 챙긴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경제 위기 이전에는 유럽 지배계급 전체에게 이득이 됐다. 하지만 이 시스템 속에서 유로화는 심지어 유럽 국가들에게도 본질적으로 외국 통화와 같은 기능을 했다. 이 때문에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에는 사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최후의 대부자 구실을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없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악순환에 빠졌다. 모든 유럽 국가에서 은행 예금은 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는다. 문제는 정부들 자신이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갚으려면 결국 (정부의 예금 보증을 받는) 은행들의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러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서방 세계에서 사실상의 기축 통화로 떠올랐다. 미국 지배계급에게 이는 대단한 이점이었다. 해외에서 뽀개를 수입할 때 돈이 부족하면 달러를 찍어 내기만 하면 됐으니 말이다. 마치 매장량이 무한한 금광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그런 금광이 있다 해도 아무 때나 금을 캐내서는 곤란하다. 금을 너무 많이 파내면 국제시장에서 금값이 폭락해서 결국 가치가 없어질 테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이다. 만약 ESM이 은행으로 전환한다면 이 은행은 다른 유럽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ECB로부터 1퍼센트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ESM이 은행으로 전환한다면 ECB로부터 1퍼센트 이하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다시 위험한 나라들의 국채를 매입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상에는 유로존이 돈을 더 많이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통해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공공연하게 이 안에 반대하고 있다. 메르켈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유로본도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제 위기 타개책에 반대하는 것은 비단 메르켈만이 아니다. 거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 연준의장 벤 버냉키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이 사실상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푸는, ‘양적완화’ 조치였다. 지금까지 두 차례 양적완화 조치가 시행됐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을 유럽연합이 뭇 하러 모방하겠는가?

둘째 이유는 1970년대의 경험 때문이다. 1970년대 거대한 경제 위기 때도 각국 정부들이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위기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한동안 세계경제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 10년을 끈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지배자들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에 대차와 레이건이 수행한 ‘혁명’, 즉 노동계급에 대한 약탈한 공격 덕분이었다. 30년 전에 이렇게 실패한 정책을 누구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셋째 이유는 유럽 지배자들이 유럽연합과 유로화 가운데 어느 것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나 봐도 그렇다. 유로화 덕분데 그리스 은행들과 기업들은 발칸 반도로 대거 진출했다. 유로화의 구매력 덕분데 그들은 발칸반도에서 민영화하려고 내놓은 공기업 등 각종 자산을 헐값에 쓸어들었다.

결국 그리스 경제 전체가 발칸반도를 이렇게 수탈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에 완전히 적응이 되면서 예전에 수익성이 있었던 산업들을 포기하거나 폐쇄했다. 예전에는 그리스의 식량자급률이 1백 퍼센트 이상이었는데 몇 가지 해결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유로본도’를 발행하자는 안이 있다.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도 유럽 공통의,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안은 위태로운 나라들에 구제금융을 캐내서는 곤란하다. 금을 너무 많이 파내면 국제시장에서 금값이 폭락해서 결국 가치가 없어질 테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리스 지배자들도 아테네를 발칸반도의 중심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지배자들도 똑같이 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유일한 선택지는 앞으로 돌진하는 것, 즉 노동자들을 살벌하게 공격하고 긴축을 강행하는 것이다.

반란의 물결

그렇다면 이들의 시도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앞설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다. 이 위기 자체가 유럽만의 위기가 아닌 세계적인 위기고, 또 그 근저에는 미르스크가 말한 이윤을 저하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 여부는 결국 그들에 맞서는 대중 운동에 달려 있다.

유럽 지배자들이 만약 유럽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 비록 아반의 시대가 도래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위기는 잠시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스만 해도 이미 2년 동안 전 국가가 반란 상태에 있었고, 이 반란의 물결이 이제 스페인으로 전염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반란은 정치적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그리스 좌파들은 모두 합해 38퍼센트를 득표했다.

불행히도 이들 좌파의 지도자들은 유럽 연합이나 잘 먹고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불분명하다.

그리스의 원래 좌파 중 가장 큰 정당인 시리자는 현재 유럽연합과 유로화 자체를 지지한다. 시리자는 자신들이 집권하면 유럽 연합과 잘 협상해서 그들의 재량적인 노선을 바꿀 보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다. 이는 제2인테르네셔널의 방침과도 비슷한다.

즉,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민당의 카우츠키와 힐퍼딩, 베른슈타인 등이 독일 제국주의를 편들며 전쟁을 찬성하고 나선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 이론에 따르면 1차 대전은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었다. 대기업들이 국제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초제국주의 시대에는 더는 강대국들이 서로 충돌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전쟁이라는 구시대적 유물은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시리자도 유럽연합과 유로화에 대해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은 역사에 의해서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는 그런 잘못된 관점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선의 참호에서 조국을 지키려는 명목으로 죽어 나갔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도록 반복선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의 안타르시아(혁명적 반자본주의연합)는 유럽연합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독표율로만 치면 안타르시아는 시리자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지만 실제 거리에서, 작업장에서의 힘은 훨씬 더 강하다. 일례로, 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시리자 학생 그룹은 7퍼센트를 득표한 반면 안타르시아 학생 그룹은 11퍼센트를 득표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유럽연합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예견한다. 만약 유럽연합이 실제로 붕괴한다면 단지 ‘단일 통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그 끔찍한 긴축을 견뎌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은 마치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을 때 독일 노동자들이 겪었던 충격과도 비슷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1차 대전 직후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혁명이 유럽에서 곧바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로존 붕괴를 단언하는 것도 아니다.

혁명의 구실은 마치 정쟁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다. 만약 이상의 분석이 옳다면 우리 앞에는 실로 엄청난 격돌이 기다리고 있다. 그와 같은 유럽뿐 아니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한판 승부가 다가오고 있다.

정리발언

진정한 문제는 그리스 자본가들이 결국 망하게 될 사업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작장을 걸고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투자 자금을 조달하려고 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결국 그렇게 투자한 실물 자본은, 즉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는 데 들어간 자본의 가치는 증발해 버렸다. 그러나 돈을 빌려 준 은행들은 이제 빚을 돌려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달리 말하면, 비록 실물 자본은 죽었지만 가공 자본은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의 파를 빨아 먹으려 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과연 좌파들이 어떤 구체적인 요구들을 내세워야 하는가, 어떤 강령을 채택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개혁주의적 관점이다. 즉 자본주의를 조금 고쳐쓰자는 관점이다. 둘째는 바로 혁명가들의 관점에서, ‘이행기적 요구’를 염두에 둔 관점이다.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후자다. 자본주의에서 대적인 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요구, 즉 이행기적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 발전이 아니라 운동의 발전이다.

이행기적 요구

이행기적 요구의 직접적인 목적은 긴축 정책 등이 강요하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행기적 요구가 실현된다면 그런 상황과 자본주의 체제가 오랫동안 양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플트 요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른바 ‘구제’ 금융의 목적은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에 심하게 노출돼 있었던 유럽 은행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그리스 은행들의 경우, 그리스 주식시장에 가면 그리스의 모든 은행을 30억 유로에 매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은행들이 구제금융으로 지금까지 받은 돈이 1천억 유로가 넘는다. 그런데 이제 또 5백억 유로를 더 받을 참이다. 다플트를 요구하는 것은 곧 이 은행들에 단 한 푼도 더 퍼 주지 말자는 얘기다.

만일 그리스나 포르투갈이 다플트를 하게 된다면 다른 유럽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의 운동이 고립될까?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그리스가 겪고 있는 문제는 유럽 노동자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민중이 들고 일어나 은행들에 대한 퍼 주기를 중단시키면 모든 유럽 노동자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유로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그리스가 만약 유로존을 탈퇴한다면 그것은 운동의 힘에 떠밀려서일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옛 드라크마를 복원함으로써 소비하고 인간적인 그리스 자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유로존 탈퇴는 결국 그리스 기업주·은행가들, 독일과 프랑스 은행가들에 맞선 전쟁 선포가 맞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면 그들도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금융 투기꾼들이 드라크마화의 가치를 최대한 떨어뜨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전쟁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멈춰선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국 금융 투기꾼들이 이 옳다면 우리 앞에는 실로 엄청난 격돌이 기다리고 있다. 그와 같은 유럽뿐 아니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한판 승부가 다가오고 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면 그들도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금융 투기꾼들이 드라크마화의 가치를 최대한 떨어뜨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전쟁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멈춰선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국 금융 투기꾼들이 이 옳다면 우리 앞에는 실로 엄청난 격돌이 기다리고 있다. 그와 같은 유럽뿐 아니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한판 승부가 다가오고 있다.

혁명의 구실은 마치 정쟁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다. 만약 이상의 분석이 옳다면 우리 앞에는 실로 엄청난 격돌이 기다리고 있다. 그와 같은 유럽뿐 아니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거대한 한판 승부가 다가오고 있다.

고립되기는커녕 국제적 연대가 확산되면서 운동이 유럽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혁명이 레닌은 “우리는 이 전쟁에서 조국이 패배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 진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노동자들이 ‘조국’ 정부를 타도하면 ‘적국’ 노동자들도 자기 정부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고무받을 것이라고 레닌은 믿었다.

그의 예측은 적중했다.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는 독일의 침략을 받아 패망하겠구나!”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일 제국주의가 독일 혁명에 의해 분쇄됐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 지배자들, 은행가들이 파산해서 무일푼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가 앞서서 그렇게 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나아가 전 유럽의 노동자들도 그리스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리스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그리스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은행들에 지급되는 이자다. 현재 그리스의 대형 은행 7개와 유럽 은행 서른 개가 그리스 공무원 전원과 연금 생활자들이 받는 것만큼이나 많은 돈을 이자로 챙겨가고 있다. 그래서 민중이 아니라 은행들을 위한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었던 것이다.

‘공포심 유발 캠페인’

지난 2년 동안 그리스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파업이 일어났다. 그래서 총선 중에 안타르시아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리스 금융권에서 돈이 계속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행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이다.” 총선 기간에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려는 테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선 기간 중 그리스의 모든 주요 언론과 보수 정당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 “만약 좌파가 득표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끝이다. 우리는 유로존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대재앙이 빠질 것이다.” 그리스 사람들의 과반수가 아직까지도 유로존에 남는 것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런 공포심 유발 캠페인 때문이다.

한편에는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대학교수들, 지식인들이 우리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그리스는 망한다고 얘기했고 시리아조차도 유로존을 떠난다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산당조차 먼저 사회주의공화국이 수립된 다음에 유로존을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이다. 좌파 진영 내에서는 안타르시아를 빼면 누구도 유로존 탈퇴를 말하지 않았다. 결국 총선 기간에 은행 노동자들의 파업은 실현되지 않았다. 파업을 호소하는 세력이 소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2차에 걸친 선거 기간 중 그리스에서 총 1백억 유로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부자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시리자 같은 좌파들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에서

는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적 유럽연합’ 요구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물론 나는 유럽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그보다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을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나에게 최상의 구호는 ‘사회주의 유럽연합’도 아닌 ‘전 세계 사회주의 연합(연방)’이다.

녹취 오정숙·번역 천정록

이집트

아래로부터 압력이 탄타위를 해임하다

이집트 대통령 모하메드 무르시가 최고군사위원회(SCAF) 수장인 탄타위를 지난 8월 12일 해임했다.

전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타도된 이후, 탄타위는 이집트 군부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8월 12일 수천 명이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그가 쫓겨난 것을 축하했다.

무르시는 무슬림형제단 후보로 나와 6월 대통령에 당선했다. 최고군사위원회는 무르시 당선 며칠 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무르시는 이 법안도 같은 날 파기했다.

또 무르시는 육군참모총장, 해군과 공군 사령관들을 퇴임시켰고 마흐무드 벡키를 무바라크 몰락 이후 공석이었던 부통령에 임명했다.

“이번 결정은 분명히 혁명의 전진이다. 민중이 혁명적으로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카이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단체(RS)의 하이탐 모함메다인은 말했다.

압력

“무르시를 칭찬만 할 때가 아니다. 더 압박해야 한다. 군부 지도자들을 재판장에 세워 그들이 민중과 혁명에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무르시는 더욱 급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안기관, 언론과 국가경제기관에 있는 옛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반드시 청소해야 한다” 하고 하이탐은 덧붙였다.

무르시는 탄타위 자리에 전직 군정보 부대장 압델 파타 엘시시를 앉혔다. 엘시시는 지난해 타흐리르 광장에서 검거된

여성 시위대들에게 가해진 치욕적인 “순결 검사”를 공공연히 옹호했던 자다.

이 사실은 옛 정권 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이탐은 지적한다. “무르시가 혁명에 공공연하게 적대적인 보안 기구의 일부 수장들을 제거하고 다른 인물들로 대체했다고 해서 보안 기구의 기능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무르시의 행동들은 그가 깨뜨리고자 하는 힘의 균형이 어떤 것인지 보여 준다. 최고군사위원회의 후보 아흐마드 샤파피끄에 맞서 그를 지지한 수백만 명은 무르시가 변화를 가져다 주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의 파업 물결은 노동자들의 참성이 점점 바닥나고 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미 이 분노의 일부는 무르시 자신을 향하고 있다.

정전과 물 부족으로 빈곤 지역들의 주민들이 시위를 시작했다. 혁명을 이어가고 더 심화시키려는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압력이 존재한다.

그 반대편에는 드러내 놓고 반혁명을 계획하고 있는 세력들이 국가기구 내부에 있다. 이들은 무슬림형제단과 혁명 세력 모두에게 실질적인 위협이다.

따라서 국가 상층 세력의 균형을 재편하는 일은 무르시 같은 개혁주의자에게 위험천만한 일이다. 무르시의 행보로 어쩌면 무슬림형제단과 군부 내 일부 분파들(현재의 개혁으로 득을 보는) 사이에 더 안정적인 동맹이 구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를 “청소”하려는 아래로부터의 운동 또한 새로운 활력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출처: Jonathan Rashed (블리커)

무르시 당선 당시 기뻐하는 이집트 민중 무르시가 이 기대를 외면한다면, 이집트 민중의 기대는 커다란 분노로 바뀔 것이다.

전국적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앤 알렉산더

파업과 시위가 이집트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2백50명이 넘는 석유 기술자들이 포트사이드 시 인근에서 점거파업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간접 고용이 아닌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포트사이드의 알 주후르 중앙병원 의사들과 구급 대원들도 파업 중이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폭행당하는 보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투쟁하고 있다.

나일 삼각주의 카프르 알다와르의 섬



사진 출처: Mohamed Omar

파업에 나선 이집트 철도 노동자들

유 노동자 7천여 명은 보너스를 요구하며 경영진을 공장 밖으로 내쫓았다고 한다.

시안 루딕

이집트와 가자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 통과소에 대한 공격으로 이 지역에서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2주 전 이집트 군인 16명을 죽인 이 공격의 책임은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에 있다. 이집트 정부는 이 지역의 ‘극단주의 관련 표적들’을 폭격했다.

하지만 많은 이집트인들은 이 주장을 믿지 않으며 라파 국경통과소 폐쇄를 원해 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73년 전쟁으로 시나이 지역을 점령했고 1982년 군대는 철수했지만, 그 뒤로도 여전히 이 지역에서 이집트 군대를 압박하고 있다. 시나이 주민 대다수는 가난 속에서 살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정권은 이집트 정부를 압박할 기회를 잡았다. 이스라엘 정권은 시나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위협하는 무장 세력들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 공격을 빌미 삼아 모든 반대 세력들을 싸잡아 비난하려고 한다.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와 이란으로

부터 사실상 지원을 받는 이집트 혁명 세력과 연계된 베두인 무장 세력이 이 공격을 진행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봉쇄 아래 있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는 재빨리 이번 공격과 상관 없다고 발표했다.

하마스는 무슬림형제단이 가자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무르시 대통령은 봉쇄된 가자의 생명선인 라파 국경통과소를 폐쇄했다. 이집트는 이번 주 3일간 국경통과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316호 / 번역 김승현 최병현

미국 대선

‘오바마냐 롬니냐’보다 중요한 것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에서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현재 상황은 결코 좋지 않다.

4천7백만 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될 정도로 빈곤이 확산돼 빈곤률은 46년 만에 최고치고, 실업률은 공식 통계만으로도 8퍼센트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닥터 뒹’(파멸 예언 박사) 루비니는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수년 동안 추세를 밀도는 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대선의 쟁점은 이런 바탕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 퓨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세 명 중 한 명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자리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복지와 연결된 건

강보험 문제,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의 쟁점이 그 뒤를 이었고, 성소수자·인종차별도 뜨거운 쟁점이다.

이 쟁점들은 오바마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2008년, 많은 사람들의 큰 기대 속에 임기를 시작한 오바마는 그를 지지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는가?

1퍼센트를 위한 ‘담대한 희망’

지독한 인종차별, 성차별, 복지 부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로 삶이 파괴되던 많은 미국인들이 보기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는 부자들에게 맞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듯했다.

물론 미국의 일부 지배자들도 오바마 당선을 환영했다. 월가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인들도 공화당 후보 매케인보다 오바마에게 더 많은 후원금을 냈다.

그러나 오바마는 그를 향한 기대의 한쪽 편에만 부응했다. 오바마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월가 출신이거나 대기업 출신이었다. 경제 위기에서 지배자들을 구제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붙은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는 오바마 정부를 따라다닌 꼬리표였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에 크게 실망했다.

오바마의 4년은 전쟁의 4년이기도 했다. 빈 라덴을 처형하고 이라크에서 철군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은 군사와 전쟁 자금을 쏟아부었다. 미국 외부의 수

용소 수감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수감자들을 고문이 합법인 국가에 인도해 버리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폭로됐다.

지난 대선에서 그가 가장 강조했던 쟁점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도, 비록 오바마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긴 했지만, 제한적 성취만 거뒀을 뿐이다.

지난 6월 말 대법원에 의해 합헌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개혁안은 여전히 가장 가난한 2천6백만 명을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하고 있다.

극빈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재정 확충도 유명무실했다. 공화당이나 보험회사들과 타협하느라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8백50만 명이 보험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에 강하게 맞설 것이라 기대했다.

지난 6월 마침내 오바마가 30세 미만의 이주자들에 대한 단속 추방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이런 기대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그림의 절반일 뿐이다. 오바마는 지난 3년 동안 언제든 발효할 수 있었던 행정명령을 내리려 하지 않았고, 여전히 이주자들이 ‘불법이주민’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그림의 나머지 절반이다.

올해 상반기에 이슈가 된 동성결혼 차별 반대 문제도 마찬가지다. 오바마는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발언을 하고, 대법원

시리아

“이것은 대중의 자발적 혁명입니다”

주디스 오어

현재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에서는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반군은 정부군의 정면 공격을 피해 전선에서 후퇴했다. 그러나 반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정부군 전투기의 공격에 맞서 완강히 버티고 있다.

시리아 흠스에서 온 무니르 아타시는 이렇게 말했다.

“알레포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군은 가난한 동네들을 공중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흠스에서 그랬듯 알레포를 포위하려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알레포는 크고 변화한 도시입니다.”

서방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자행하는 폭력을 이용해 개입을 정당화하려 한다. 미국은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떠한 서방 개입이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혼란을 가중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폭력이 더욱 더 늘어나 보통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반정부 세력 가운데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미래에 서방과 협력할 수 있는 자들만 지원하려 든다. 제국주의 열강들이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은 시리아 민간인들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아사드 이후 과도 정부의 구성이다.

무니르는 사람들이 아사드의 탄압을 이겨내고 힘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흠스 구시가의 주민들은 70여 일 동안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첫 몇 주 동안



사진 출처 시리아 지역조정위원회(CO)

7월 6일 이дли브 지역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어떤 서방 개입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은 음식과 의약품을 몰래 반입하고 사람들을 밖으로 빼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족이 보낸 영상을 보면 정권이 흠스를 완전히 파괴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그로즈니나 사라예보처럼 처참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대중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혁명입니다.”

무니르는 반란의 성패가 아사드 정권을 타도하고자 하는 대중의 헌신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저항은 민중의 통제 아래 있다

사이먼 아사프

지역조정위원회들을 이끌고 있는 시리아 혁명 지도부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자유시리아군 부대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 수칙을 공표했다.

데이르 엘주르, 흠스, 다마스쿠스 등 반란 지역의 많은 주요 부대들이 이 수칙

을 지키겠다고 서약했다. 알레포의 한 부대도 이 현장에 동의했지만, 알레포를 방어하고 있는 주요 통합 부대는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에 행동 수칙을 발의한 것은 저항을 계속 민중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함이다. 이 행동 수칙은 “독재에 맞서 시리아 혁명가들을 방어하고 정권을 기필코 몰

아낼 때까지 혁명을 계속한다” 하고 선언하고 있다.

이 행동 수칙은 포로의 대우, 반란 자금의 모금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종파 갈등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맞서서 종교적 관용과 단결을 옹호할 필요를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안적 사상과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바셈 치트 레바논 사회주의자

최근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서 이탈이 늘고 있는 데서 보듯 아사드 정권은 무너지고 있다. 아사드 정권은 오직 민중 반란을 잔혹하게 짓밟으며 버틸 뿐이다. 대중 운동 일부는 정권의 무자비한 공격에 대응해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운동 자체가 살아남는 것이 진정한 쟁점이다. 혁명은 매우 개방적이고, 중앙집권적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번

에서 이것은 장점이다. 정권의 공격 목표 설정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시리아 현지에서 아사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외부 세력의 지령을 받아 행동하지 않는다. 세계 열강이 개입하려 했지만 혁명을 도둑질하진 못했다. 우리는 정권에 맞서 혁명의 편에 서야 하며 그와 동시에 국제 개입에도 반대해야 한다.

반란은 아래로부터 성장하고 있다. 지역조정위원회들은 포화와 정권 측 스파

이들의 위협에도 계속 세를 넓히고 있다. 여전히 대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위들은 흔히 상징적인 구실을 하면서 혁명 세력이 획득한 지역들에서 정치 활동을 지속시킨다.

대안

바로 이러한 곳들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자발적 조직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대안적 사상을 창출하고 있다. 지도부는 투쟁을 통해 유기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의 안전을 지키고, 의사들이 병원을 다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꾸려져 식량 공급, 난민 구호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시리아 혁명은 이집트 혁명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돌파구들이 있었다. 노동계급은 이미 부분적이나마 경험과 기층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에서는 40년 동안이나

정치가 사실상 부재했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이 반란에 동참하고 있지만, 조직화돼서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싸움이 쉽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 나타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강한 연대 의식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지배자들에 맞선 이러한 역사적인 투쟁들을 통해 서로 연결돼 있다고 느끼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16호 / 번역 정중수

은 동성결혼을 차별하는 현행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사실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은 이미 35년 전 최초로 발의됐다. 오바마는 이전 민주당 정부와 꼭 마찬가지로 머뭇거리고 망설이다 선거 때가 되어서야 공화당과 차별점을 긋는 데 이 쟁점을 이용하고 있다.

요컨대, 오바마의 희망은 “담대”하지도 않았고, 그나마도 99퍼센트를 위한 몫은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지배자들은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듯하다. 오바마가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더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벅스까지 1퍼센트’라고 할 만한 공화당의 롬니 같은

자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다.

“귀족”, “인종주의자”, “긴축론자”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재벌 가문 출신인 밋 롬니는 자기 재산만 2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알려진 갑부다. 롬니는 헤지펀드회사 베인캐피털 최고경영자로, 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했던 것으로 악명 높다.

그는 오바마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며 공공연히 비난해 보수결집을 노리고 있다.

“빈곤층 따위 신경 안 쓴다” 하고 말해서 “귀족”이라는 딱지가 붙은 롬니는 러시아를 “공공의 적 1호”로, 중국을 “환율

조작자”로 부르는 냉전주의자이기도 하다. 롬니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보다 부유한 것은 “신의 섭리” 때문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이 가야 할 길”이다.

롬니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폴 라이언도 결코 롬니 못지않다. 그는 하원 예산위원회 의장으로서 재정 감축과 복지 삭감에 앞장섰고, 골드만삭스·시티은행 등의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내부자 거래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을 수수하고 카지노 설립을 지원한 혐의도 제기됐다.

부통령 후보로서 낸 공약도 향후 10년간 정부지출 5조 3천억 달러 추가 삭감, 현재 36퍼센트인 법인세를 25퍼센트로

대폭 인하, 노인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어’의 민영화 등 ‘1퍼센트’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것들이다.

오바마의 시능뿐인 기업 규제조차 질책하는 미국 지배자들의 지지는 공화당으로 쏠리고 있는 듯하다. 군수기업의 대변자로 정계에 복귀한 딕 체니 같은 인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업들의 후원금도 민주당보다 공화당에 세 배 이상 많이 풀리고 있다.

그러나 롬니와 라이언 모두 너무도 노골적으로 지배자들의 대변자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대중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점거하라’ 운동으로 드러난 반자본주의 정서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긴축 반대, 전쟁 즉각 종식, 부유층에 대한 공격적인 소득세 인상, 인종과 성 평등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녹색당의 질 스타인이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저명한 미국의 진보 지식인 하워드 진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가 백악관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누가 거리에, 카페에, 정부청사 홀에, 공장에 ‘앉아 있느냐’다. 누가 투쟁하고, 누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누가 시위에 나서느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결정할 것이다” 하고 쓴 바 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점거하라’ 운동에서 드러난 미국 운동의 잠재력이 어떻게 대중적 저항으로 표현될 것인지를

김준효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용역강패 — 국가 폭력의 보조 수단

자본의 사병인 용역강패들이 에스제 이엠에서 유혈낭자한 폭력을 사용해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내쫓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투쟁 중인 작업장에 용역강패들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이후 발레오만도, KEC, 유성기업 등지에서 자행된 일련의 폭력 사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본가들이 ‘공권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꺼이 사적 폭력에도 의존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이미 2010년에 ‘미래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민간군사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자본가들이 용역강패들을 마음 놓고 사용하도록 날개를 달아줬다.

정부의 목인과 보호가 없다면 강패들이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마음껏 짓밟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문성호 컨택터스 회장이 새누리당 주요 간부였고, 주폭과 학교폭력 등 ‘5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는 조합원들의 구조 호소를 외면하고 용역 강패들을 비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컨택터스가 ‘공권력’이 아니었다는 점만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교육과 의료에 이어 급기야 폭력까지 상품화시키는 신자유주의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 계급 지배의 폭력적 본질을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극소수의 지배자들은 다수의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동의와 설득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찰, 군대 등의 폭력 기구에 의존한다. 따라서 ‘공권력’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지배자들을 위한 제도적이고 합법적인 폭력 수단이다. ‘공권력’을 통한 강제와 폭력이 없다면 자본주의 질서는 며칠도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지배자들은 경찰과 같은 합법적인 국가 폭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러시아 혁명이었던 부하린은 《코뮤니즘 ABC》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의존하는 폭력은 군대와 경찰과 감옥뿐 아니라 스파이와 조직된 파업 파괴자, 살인정부



사진 출처: 김대중연구소

지배계급의 “사냥개들” 컨택터스는 2001년 효성 파업,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 이라크·아프간 침략 전쟁에 투입된 용역강패·용병 등의 한 이름이다.

업자 등과 같은 보조 기관에도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각한 정치 위기에 빠진 지배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탄압을 자행하려 할 때 “보조 기관”에 의존하곤 한다.

2011년 2월 이집트에서 보안경찰들이 혁명적 시위를 짓누르기 위해 강패들을 대거 모집해 타흐리르 광장에 투입한 것은 이런 점을 잘 보여 준다.

보조 수단

사실, 2009년에 용산 참사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대한 살인 진압은 컨택터스 같은 용역강패가 아니라 합법의 탈을 쓴 경찰이 자행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은 이런 소름 끼치는 경찰 폭력으로 심각한 반발과 비난에 직면하자, 그 후에는 정부 책임을 은폐하고 비난의 화살을 개별 경비업체에게 돌리기 위해 경찰 대신 용역강패도 번갈아 사용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도 2001년 4월에 대우자동차 조합원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경찰 폭력(영화 ‘부러진 화살’에 잠깐 나오는데) 이후에 비난 여론 속에 노동쟁의 현

장에 경찰보다 용역강패 투입이 잦아진 바 있다.

그래서 2001년 여름에는 울산에서 효성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식칼과 가스총과 고무충격총, 심지어는 전기충격기로 무장한 강패 수백 명이 백주대낮에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때로는 ‘공권력’보다 자본가들이 사주한 강패들이 노동자들의 저항을 짓밟는데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경찰과 달리 용역 경비들은 공장 안에 상주하며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다. 법적인 절차에 얽매일 필요도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강력한 민주노조가 있는 대기업 작업장에도 사장들이 고용한 건장한 용역 경비들이 상주하고 있다.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는 1938년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된다는 것은 자본의 반격 방식이 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자본가 계급은 정규 경찰과 군대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평화적 시기’에조차 자본가 계급은 공장에서 강패들과 파업 파괴자들을 무장시켜 놓았다.”

이런 자본가들의 폭력적인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은 국회나 법원보다는 거리와 공장에서의 강력하고 단호한 노동계급의 저항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국회에서 컨택터스를 폭로하긴 하지만, 사실 민주당 집권 시절에도 파업 현장에 용역강패 투입은 비밀비재했다. 민주당 의원 임내현이 컨택터스의 변호사였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허가가 취소되고 약간의 벌금을 물더라도, 이름만 바뀌어 재등록하고 순식간에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현실에서 법적 제재도 한계가 있다.

한편, 지배자들은 국내의 저항을 짓누르기 위해서만 용역 강패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 수행에 따른 정치적·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민간군사업체들을 전장에도 투입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주둔 병력의 절반 이상이 용병이다. 인기 없는 전쟁에서

미국 병사들 대신 용병들이 죽는 것이 전쟁 수행에 따른 미국 지배자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다. 민간인 사망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개별 용역업체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

미국의 악명 높은 민간군사업체 ‘블랙 워터’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민간군사업체 ‘블랙케이’가 하는 구실은 이런 것이다.

이처럼 폭력 산업이 육성되고 거대화하는 것은 **아반적인 체제의 단면을 보여 준다.**

자본주의 자체가 폭력에 의존하는 체제다. 전쟁과 국내 저항 운동에 대한 아반적인 탄압은 서로 경쟁하면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 특징이다.

우리는 용역강패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모두 없애고, 강패 기업, 살인 기업을 불법화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나아가 용역강패들을 끊임없이 육성하고 활용하고 보호하는 정부와 자본가들, 이 체제에 맞선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강철구

만도 사태가 보여 주는 쓰디쓴 교훈

부품사 민주노조의 만형 격인 만도 노조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 노동조합운동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유사한 일이 반복됐지만,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만도 노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이 작심하고 직장폐쇄 카드로 꺼내 들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식의 견해는 과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나 KT·서울지하철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을 때도 긴장이 돌았지만,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의 토대를 흔들지는 못했다.

‘25년 만도 노조의 역사가 한 방에 무너졌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지만, 이것도 진실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만도 노조가 얼마나 약화돼 왔는지를 보여 준다.

지난해 금속노조의 기관지 〈금속노동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노조의 역사와 그 노조의 실력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직장폐쇄에 노조가 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신감과 결속을 높이며 경제·정치 투쟁 모두에서 회피하지 않는 정치적 노동조합운동이 필요하다.

너지거나 위태로워진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등도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이다.”

만도 노동자들은 1998년 분할 매각 과정에서 벌어진 대규모 정리해고를 악몽처럼 기억하고 있다. 이후 회사는 6개 작업장으로 쪼개졌고 고용불안도 계속됐다. 노조는 2008년에도 매각 반대 투쟁에 나서야만 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노조는 투쟁으로 이에 맞서기보다는 한 걸음씩 뒷걸음

질 쳤다. 특히 2008년 이후 한국 자동차 산업이 단기 호황을 누리면서 ‘안정적 노사관계’가 유지됐다. 노조는 사측의 외주화를 허용하는 대신, 주식 배당 등 눈앞의 실리를 추구했다.

이 속에서 투쟁의 근육은 무뎠졌다. 일부 노조 간부들이 앞장서 이런 협소한 실용주의를 부추겼다. 이번에 친사측 노조 위원장이 된 공병옥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정치투쟁과 허구적 산별주의로 명분도 없이 투쟁을 남발한 금속노조와 결별한다.”

이런 그가 2007년 매각 반대 투쟁을 이끈 지도부였다는 사실은 정말 씁쓸한 일이다.

그러나 만도 사측은 정부와 대자본을 등에 업고 용역강패들을 동원해 불법적 직장폐쇄까지 감행한 마당에, 왜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뛰어넘는 연대로 정치투쟁을 벌이면 안 되는가? 왜 밤에는 잠 좀 자자는, 불법파견을 정규직화하라는 금속노조의 파업에 명분이 없는가?

사실, 만도 노동자들 사이에선 ‘금속노조의 정치파업 일정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김스 노동자들은 안됐지만, 꼭 만도가 적자 기업을 인수해야 하는가’, ‘어차피 지난 집행부가 합의한 것인데, 외주화를 철회하려고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등의 정치적 물음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정치

그러나 “사측의 거듭된 악의적 선동을 간과했다”는 김창한 지부장의 말에서 보듯, 노조 지도부는 싸움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며 우리 편을 정치적으로 무장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지 않은 듯하다. 좌파 활동가들도 정치적으로 취약하긴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김창한 지도부는 용역 1천여 명이 불려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협상과 투쟁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결국 조합원들에게 휴가 지침을 내렸다. 용역강패가 밀고 들어왔을 때는 이를 막을 동력도 없었다.

김창한 지도부는 결국 우파적 압력에 밀려 사퇴했고, 그 공백을 틈타 친사측 노조가 들어섰다.

따라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신감과 결속을 높이며 경제·정치 투쟁 모두에서 회피하지 않는 정치적 노동조합운동이 필요하다. 정치적 주장과 대안으로 무장해 있을 때, 자신감이 유지될 수 있고, 자신감이 뒷받침돼야 전투적 전술을 채택할 수 있다. 또 조합원들이 스스로 행동하는 전투 속에서만 조직력과 투쟁력은 강화될 수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꾀할 좌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도 조직돼야 한다.

지금 만도 사측이 금속노조의 교섭권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규탄해야 마땅할 일이지만, 교섭권만 확보한다고 무너진 노조를 세워낼 수는 없다. 활동가들이 우리 쪽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투쟁을 조직해 나갈 때, 다시금 민주노조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설

대선과 복지 논쟁

부자 증세로 양질의 보편적 복지를

장호중

8월 8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박근혜의 ‘맞춤형 복지국가’가 기업주·부자 맞춤형 복지국가라는 사실을 보여 줬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26조 5천억 원을 더 걷겠다고 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증세 규모는 그 4분의 1도 안 되는 5조 8천억 원(5년 누적) 정도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기업주·부자들에게는 세금을 82조 원이나 깎아주고서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돈으로는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꿈도 못 꾸는다. 증세 대상에서도 지난 5년 동안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둬 온 기업주·부자들에 부과하는 법인세·소득세는 손도 대지 않았다.

투기적 거래인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린다지만 그 규모가 1천억 원에 불과한데다 ‘주식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나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쥐꼬리만 한 ‘증세’ 계획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회원제 골프장의 소비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또 끼워 넣었다.

박근혜는 이미 지난 7월 법인세를 올리거나 부자 증세를 하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다. 결국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내서 복지를 하자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료를 일부 인하는 대신 그만큼 간접세인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결국 지금 수준의 복지조차 평범한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슈퍼부자 증세안

한편 민주당은 연간 5조 원에 이르는 ‘슈퍼부자 증세안’을 내놨는데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실제로 기업주·부자들에게 증세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만 만회하려고 해도 매년 17조 원 안팎의 증세가 필요하다.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증세안을 내놓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을 하겠다니 미덥지 않다.

게다가 법인세율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노무현 정부 시절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올랑드도 슈퍼부자들에게 75퍼센트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소득세 인상안은 ‘슈퍼부자’ 증세라기보다는 고소득 노동자들까지 과세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계획일 뿐이다.

이런 한계는 민주당이 자본가 계급 일부에게도 기반을 두고 있는 데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들은 개혁을 바라는 대중의 표를 의식해 복지 확대를 외치지만 그것이 자본가들의 투자 의욕과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이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문제인도 민주당이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중시하고 경제성장을 후순위로 하는 데서 벗어나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해야 한다” 하며 두 길 보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에 의존하거나 이들의 뒤통무니를 쫓는 식으로는 복지 확대를 이룰 수 없다. 노동자들이 보편적 복지 요구를 내걸고 독립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부자들이 양보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가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까닭

이명박의 무상보육 후퇴 시도는 지배자들이 결코 호락호락 복지 확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단지 재정적자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해에 추가된 예산에 현재 부족분까지 다 합쳐봐야 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은 3조 원 정도인데 이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연간 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돈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 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정책 방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 말이다. 보육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면 교육은 왜 그럴 수 없을까? 의료는 왜 그럴 수 없을까? 무상보육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은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자극할 수 있다. 무상급식 논란과 함께 복지 논쟁 지형 전체가 좌경화한 것에서 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은 대중적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새누리당도 당장 선거를 의식해 자기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육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려 했다. 이는 거꾸로 오늘날 왜 ‘보편적 복지’를 요구해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

첫째, ‘복지병’은 커녕 경제 위기 고

정규직 노동자가 더 내야만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가?

진보진영 내에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견해(이른바 ‘보편적 증세’)가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노동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무상의료를 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운동은 대중적 호응과 지지를 얻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를 늘리려면 그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임금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는 ‘협박’에 조직 노동자들이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런 주장이 결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정규직 책임론’에 굴복하는 것이고 이는 복지 확대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좌파의 일관된 반대 덕분이었다.

당시 〈레프트21〉은 이런 대안이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 잠재력을 무시하고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한 한계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최근 이 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이 〈미디어오늘〉과 한 인터뷰는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는 지난 2년여간의 복지국가 운동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그 원인을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등 노동자 조직들이 ‘보편적 증세’ 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데서 찾는다.

그러나 이는 열악한 복지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복지를 위해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부자들이 양보하게 만들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이런 운동의 구실이 결정적이었다.

잠재력

조직 노동자들은 그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차지하는 물질적 지위 때문에 기업주·부자들을 강제할 잠재력이 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손을 놓으면 자본가들은 이윤의 일부가 아니라 그 원천을 잃는다.

그런데 이 잠재력이 아무 때나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손을 놓으려면 단결해야 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온갖 공격을 극복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보편적 증세’론은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한 책임이 정규직의 이기주의에 있다는 ‘정규직 책임론’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고 자신감을 갉아먹을 뿐이다.

복지국가 운동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직 노동자들이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지 거꾸로 양보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핵발전 추진의 만행 — 밀양은 7년째 전쟁 중

지금 밀양 주민들은 신고리원전 전력 공급용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투쟁을 7년째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월에 고(故) 이치우 씨(74세)는 한전의 폭력적인 공사 강행에 맞서 분신했다. 그래도 한전은 잠시 공사를 중단했다가 6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에 참가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평생을 바쳐 농사를 지어 온 백발의 할아버지·할머니들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에서 주민 30여 명이 증언한 피해 사례

들은 정부와 한전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 줬다.

한전 직원들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철탑 부지를 위한 벌목을 막으려고 나무를 감싸 안으며 산을 따라오르자 “위리위리”하면서 개취급을 하고, 넘어진 할머니들을 “불로 불여라, 화장시켜라” 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베인 나무가 주민들을 덮치고 용역과 싸우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구급대에 실려가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벌목을 저지하려던 이 마을 약산사 주지스님(여

성)에게 달려들어, 회음부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할퀴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스님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현장소장이 찾아와서 “네 년을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는 협박도 했다.

밀양 주민들의 바람은 “지금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고 싶다.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밀양의 땅, 농토를 물려 주고 싶다”는 것이다. 또 “76만 5천 볼트 초고압 전류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 수가 없다”는 두려움의 외침이다.

“833mG의 전자파에 단기 노출되더라도 신경세포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다.

적반하장격으로 한전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13명에게 손해배상비용으로 매일 1백만 원을 청구했다. 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현장의 토지는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해 토지가 강제수용 당하게 된다. 정부와 1퍼센트만을 위한 법제도가 주민들을 더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은 핵발전이 그 자체로도 인류에게 재앙적일 뿐 아니라 건설 과정도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신고리원전의 증설 계획을 취소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모든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하고 증설 계획을 폐기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민주통합당처럼 “주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공사 추진”만 문제 삼는 것은 부족하다.

핵 없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0월 대중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수십만 명이 결집하는 일본 반핵 운동의 바람이 한국에도 불어 오기를 바란다.

이슬기

학교비정규직

유령살이 그만! 파업을 준비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유령살이’를 거부하고 교육감 직접 고용·호봉제 실시·전직직 무기계약제를 요구하며 행동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18일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 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85퍼센트가 참여해 92.6퍼센트(2만 5천여 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했다.

“제가 파업 한 마디 하면 우리 조합원들은 열 마디씩 합니다. 무서워요.(웃음)” 박규자 전국학비노조 위원장도 ‘무서워할’ 정도로 현장의 투쟁 열기가 그만큼 뜨겁다. 이런 자신감에 힘입어 지난 7월부터 강원·서울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시작했고, 전북·경기·광주·전남교육청과도 교섭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전남과 광주는 이미 지난해부터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을 포함한 열 곳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교과부는 이것을 부추기는 장본인이다. 그러나 교과부, 시·도 교육청이 학교에 지급한 예산으로 임금을 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는 교육감이다.

매우 오래도 학비노조는 교섭에 불응하는 교과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집회와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7월 23일 교과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 학비노조는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높여가고 있다. 8월 말까지 교과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9월 이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만여 명이 파업을 벌인다면 그



8월 23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는 교육감이다.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다. 실제 지난 4월에 대구의 초·중·고 네 곳에서 20명이 파업에 돌입해, 이를 만에 유급병가 확대, 연봉산정일수 확대, 정년 연장 등 핵심 요구 대부분을 쟁취했다. 20명 파업에 이 정도 성과라면, 2만 명이 철옹성처럼 싸운다면 더 많은 요구들을 쟁취할 수 있다.

파급력

한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압박으로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교육공무직 신설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호봉제 도입, 명절휴가비 등 수당 신설, 방학 중 휴업수당 지급,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연수와 연가 보장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요구가 반영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중 11만 2천여 명이 준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법안 내용이 구체적인 것과는 달리 재원 마련은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안이 통과되

라도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온전히 국회에만 기대는 방식으로 투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최근 문재인 등 민주당 대선 주자가 학교비정규직 토론회에 참석하고 ‘교육공무직 신설 특별법’에 관심을 보인 것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투쟁의 선두에 서 있다. 이 투쟁이 승리하려면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학교 안팎에서 연대를 건설하고 지지를 넓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는 10월 27일에 ‘새로운교육실현국민연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유령이기를 거부하고 당당히 싸움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자.

조수진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충남지역 건설플랜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충남지역 플랜트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투쟁 중이다. 충남 지역에는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등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밀집돼 있다. 노동자들은 공휴일 유급휴가 보장과 연월차 확대, 경조사 시에 휴가 연장, 휴게시설 확대,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플랜트 노동자들이 “몇 년째 제자리인 임금과 제대로 손 씻을 곳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단체협약”을 꼭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대회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플랜트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기온이 36도 이상 올라가면 현장은 그야말로 이글거리는 불구덩이처럼 덥습니다. 정부마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작업을 중단하라 권고했다고 하는데, 관리자들은 물과 얼음을 주며 버티라고 합니다. 사측이 준 물과 얼음을 먹고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배탈이 나기도 했어요.

“현장에 휴게소가 있기는 하지만, 마지못해 지어 놓은 거라 협소하고 더워요.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에 그늘을 찾아 땅

바닥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샤워장도 없어요. 그나마 노조가 없는 곳은 휴게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불성실한 교섭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사측에 항의해 한 달째 ‘표준작업’ 투쟁 중이다. ‘표준작업’ 투쟁은 야간과 주말 노동을 거부하고, 근로시간 중에도 정해진 업무만 하는 태업을 통해 생산에 차질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사측은 성실히 교섭을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노조 간부들을 고발하는 등 탄압을 자행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의 분노가 높다.

“사측이 도발을 했습니다.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예요. 플랜트 노조는 충남지역에서 가장 큰 노조입니다. 이번 투쟁으로 노조가 확대될까 봐 탄압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라도 이왕 싸울 거 제대로 싸우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들이 도발을 했으니 우리도 더 단호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파업에 함께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에 나선 충남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자.

조명지

건설노조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적정 임대료 보장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과 25톤 연합회 회원들이 8월 7일부터 왕십리 뉴타운 1공구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와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임대료(임금)에서 유류대·수리비·보험료·장비 할부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려고 “적정 임대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새벽 5시부터 흙을 실어 나르며 하루 12시간 씩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항상 사고 위험에 놓여 있다. 노동자들은 이런 과도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것을 막고 임금 체불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15톤 덤프트럭 조합원들 중 다수는 25톤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덤프를 치고 있기 때문에 15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대료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지부는 15톤과 25톤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5톤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켰고, 지부에서 가장 큰 현장인 왕십리 뉴타운 현장을 타겟으로 집중 집회와 노숙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25톤 노동자들은 투쟁이 승리

할 때까지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8월 8일부터 25톤 노동자들과 15톤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종합건설사 네 곳(삼성,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림산업)과 맞서 투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호락호락하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미 건설사들은 현재까지 두 차례 차량 투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조합원 20여 명이 새벽에 신속히 집결해 이를 막아냈다.

우리는 대형 건설사들에 맞서 현장 앞에서 투쟁하는 동시에 구청과 경찰서에 사측의 불법 행위(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불법다단계하도급, 비산먼지 단속·운행제한 시간 위반 등에 대한 고소·고발과 정보공개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동구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구청을 압박할 계획이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현장을 봉쇄하고 투쟁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서로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쟁자라는 인식이 있었던 15톤과 25톤 노동자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떨쳐 버리고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라는 연대 의식을 키워갈 것이다.

박재순 건설노조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

르노삼성

‘절망퇴직’이나 희망을 위한 투쟁이나

르노삼성자동차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최근 사측은 연구개발과 디자인 부문을 제외한 전체 인원의 80퍼센트인 4천8백여 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다.

르노닛산그룹 회장 카를로스 곤은 ‘구조조정’의 황제, ‘코스트 킬러(Cost Killer)’, ‘구조조정 전문가’로 악명을 떨쳐 왔다. 지난 2000년 닛산에서도 2만 명을 대량해고하고, 5개 공장을 폐쇄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르노그룹이 삼성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르노삼성자동차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03년 10만 대였던 판매 실적이 2010년에는 27만 대로 증가했다. 2010년에는 매출액도 5조 원을 넘어 세 배 이상 성장했다.

“그 비결은 르노삼성자동차의 혹독한 노동자 쥐어짜기”였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1인당 차량 생산대수는 71.6대로, 현대차 50대, 한국GM 60.7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다. 반면 임금은 현대차, 한국GM 노동자들의 70퍼센트 정도다.

노동자들의 고통 속에서 판매와 매출액이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매년 감소해 왔다. 이는 “르노와 닛산의 이익 빼가기”가 원인이었다. 르노는 삼성자동차를 인수한 후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서, 기술사용료와 부품비 명목으로 막대한 생산이익을 유출해 갔다.

르노그룹이 대대적인 구조조정 후 르노삼성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지난 2011년 노조를 건설했고 지난 8월 13일 기업 설립 이후 역사상 첫 파업을 벌였다. 2시간 부분파업으로 전체 생산라인이 중단됐다. 급속노조 르노삼성성지회는 생산직 노동자 2천5백여 명 중 조합원은 10퍼센트인 2백여 명으로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한 생산라인에서 전체 5개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파업만으로도 공장을 멈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노동조합이 단호하게 싸운다면 노동자들이 ‘절망퇴직’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선택할 것이다. 완성차 노조들과 급속노조의 연대도 필요하다.

유병규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서울 서부지구 포럼
마르크스주의로 본 오늘날의 노동계급
연사 : 정병호(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 8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지하 교육장(홍대입구역 1번 출구)
참가비 : 2천 원(학생 1천 원)
문의 : 010-7725-9823

서울 동부지구 포럼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 왜 사회주의인가?
연사 : 강동훈(레프트21)기자
일시 : 8월 23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3층 2강의실(간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 3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 010-9453-5318, 010-6319-3062

경기지회 포럼
21세기 사회주의
연사 : 김인식(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 8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회의실
(수원역 지하상가1번출구 도보10분 매탄동주민센터 옆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 2천 원(학생 1천 원)
문의 : 010-8700-4647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비정규직 교수

비정규직과 대량해고 양산할 시간강사 악법에 맞서자

지난 8일 교과부의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무산됐다. 교과부는 공청회를 고려대에서 개최하려 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압력으로 개최 하루 전에 서대문구청으로 장소를 급하게 변경했다. 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들은 공청회 장소를 기습 점거해서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공청회를 강행하려는 구청 공무원 일부가 “배우신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지자, 한 조합원은 “배운 놈도 먹고는 살자!” 하고 맞받아쳤다. 공감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간강사제를 폐지하고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생색을 내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확대와 대량해고, 처우 악화를 부를 ‘시간강사 악법’이다. 개정안을 보면,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포함되는 교원이지만 정작 교원의 처우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



8월 8일 교과부의 기만적 공청회를 무산시킨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들

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 시행령 초안에는 한 대학에 소속돼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20퍼센트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기준으로 삼는 법정교원확보율(계열별로 일정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전임교원확보율)

을 교원확보율(겸임교수, 초빙교수 등 비정규교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포함)로 완화해 사립대학들에 적용했다.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사립대학들은 정규직인 전임교원을 더 뽑지 않아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들 입장에선 값싼 강사들로 교원확보율을 채울 길이 열린 셈이다.

시간강사법 시행령을 무산시킨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들

게다가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들만 교원에 포함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몇몇 전업강사들에게 강의를 몰아 주고 나머지 강사들을 해고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1만~4만 명까지 대량해고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늬만’ 교원

또 시행령은 채용방식, 계약기간, 강의료, 계약해지방식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초빙교수, 겸임교수제를 명문화한다. 결국 교원이 된 강사는 ‘무늬만’ 교원이 될 것이고, 나머지 강사들은 처우가 더 열악한 초빙교수, 겸임교수로 채용될 것이다. 심지어 교원이 된 강사도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하려면 초빙, 겸임교수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안그래도 이미 대학 강사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때문에 열악한 처지를

강요받고 있다. 시간강사들은 여러 대학을 전전하며 강의를 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처지 때문에, 연구는커녕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강사들의 노동조건 문제는 고액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의 수업권 문제로도 직결된다.

따라서 시행령 추진을 즉각 중단시키고, 총체적 악법인 시간강사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전임교원을 100퍼센트 충원해서 대학의 공공성을 살려야 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지금의 ‘강사법’ 폐기를 주장하면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대체입법을 위한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이 악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량해고에도 강력하게 맞서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비정규직과 대량해고를 양산할 시간강사 악법에 노동자·학생 연대로 강력하게 맞서자.

이아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활동가

누구를 위한 핵발전인가

‘원자력’이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어긋난 말이다. 이른바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원자가 아니라 핵에서 힘을 얻는다. 원자에서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곧 죽어도 ‘핵발전’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핵 분열로 인한 발전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원자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핵발전으로 인한 피해는 자본주의의 아만성의 끝을 보여 준다. 핵발전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있는 핵무기를 보자.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진 후 한 생존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친구 중 한 명은 이미 죽어 있었는데 온몸이 시커멓게 타고 몸이 찢겨 너털너털해진 채 물에 빠져 있었다.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상처에서 뽑어져 나오는 피로 다른 친구 옷에 붙은 불을 끄려 하고 있었다.” 이렇게 끔찍하게도 아만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드라마 〈아이스〉 촬영 때

“핵발전소는 미사일 공격을 당해도 끄떡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삽입해 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핵이 안전하다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핵발전을 보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를 다룬 다큐멘터리인 〈체르노빌 전투〉에는 체르노빌 사고를 마주하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나온다. 한 집단은 이 사고를 무마하려는 군 장성과 총리고, 다른 한 집단은 그들에 의해 체르노빌 사고 현장으로 밀어 넣어지는 평범한 노동자들과 군 사병들이다. 체르노빌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밀어넣어진 노동자들은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모르고 투입됐다. 그들은 그들이 왜 가만히 서 있는데 코피가 나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의 젖터미들을 수습했다. 방사능 유출이 가장 높은 곳은 도저히 사람이 있기 힘

들어서 노동자들이 교대로 10초씩 한 삽 파고 교대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 노동자 3만 4천 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군 장성과 총리는 체르노빌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 핵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저들이지만 피해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지게 된다. 평범한 사람들은 핵발전과 이해관계가 없다. 평범한 사람들은 핵무기를 없애고 고장 난 핵발전소를 폐쇄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아직도 후쿠시마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본 지배자들은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려고 했다. 이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항에 나섰고 수많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이에 동참했다. 정부는 핵발전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핵발전에 맞선 일본 민중의 저항이 우리의 대안이다.

양효영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지금 이 체제다

나는 20대다. 그리고 일반생이다.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계산을 하고, 청소를 하는 그 흔한 식당 일반생이다. 그날도, 내가 아무리 팔아도 내 돈이 되지 않는 빈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바로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려왔다. 어느 교수가 남학생에게 하는 충고인 듯했다. “취업을 잘하려면 외모를 잘 가꿔야 해. 잘생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 호호 너도 할 수 있어. 호호” 나는 귀가 거북했다. 청년실업 1백만 시대다. 그러나 사회는 이 청년들에게 취업의 어려움이 당신의 부족함과 나태함, 눈높이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진다. 나 또한 박근혜는 절대 모르는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남들이 먹던 음식을 맨손으로 만져야 할 때, 마치 하수구

에 엉겨 붙은 머리카락이 된 기분이다. 씹쓸하게 밥을 우적거리던 그 남학생도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모순된 충고인가. 한쪽에서는 대량해고와 강매를 동원한 폭력에 노동자들이 죽어나간다. 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의 불안에 떨며 쫓겨 살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들에게 조금만 노력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견디면 안정적인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 우리의 정신 상태와 능력을 시험에 들게 한다. 그러나 시험에 들어야 하는 것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자 높음을 하는 정부와 자기 배만 채우는 사학재단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일삼는 대기업들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박탈하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병든 자본주

의 체제가 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교수의 손에는 〈조선일보〉가 들려 있었다. 1패센트는 당신의 부족함만을 꼬집는다. 그러나 99퍼센트는 말한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지금의 이 세계라고. 또한 당신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힘을 말하고 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변혁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부디 그 남학생이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 보면서 한숨 쉬지 않기를. 우리 모두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추한 체제의 진실을 비추어 보기를. 오늘도 손톱에 낀 음식찌꺼기를 빼면서 간절히 외친다. 당신이 나에게 공감한다면 무기력과 자책을 털어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언을 걸어야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박한솔

독도 세리머니를 징계한다는 IOC의 위선

박종우 선수가 축구 경기 후 ‘독도 세리머니’를 벌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매달 수여를 보류했다. “박종우의 행동이 ‘정치적 행위’였으며 올림픽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IOC의 행동은 위선적이기 짝이 없다. IOC는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찢어진 성조기를 들고 나와 ‘9·11 테러’ 희생자 위령제를 지낸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부시가 벌이고 있던 ‘테러와의 전쟁’ 홍보장이었다. 중국 정부의 티벳 시위 유혈 진압에 맞서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요구에 IOC는 정치적 중립을 들어 올림픽 보이콧에 반대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올림픽 개최를 구실로 중화민족주의를 선동하고, 위구르족 탄압을 강화했다. IOC는 사실상,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편드는 정치적 구실을 한 것이다. IOC는 티벳의 올림픽 참가를 불허했다. 티벳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올림픽 자체가 정치적인 행사다. 각국은 올림픽을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느라 여념이 없

다. 나치의 홍보장으로 전락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대표적 사례다. 전두환 군사정부는 1980년 광주항쟁을 유혈당자하게 진압했다. 하지만 이듬해 IOC는 이 유혈당자한 정권에 올림픽 개최라는 선물을 안겼다. 한국 정부는 그 보답으로 서울평화상을 만들어 당시 IOC 위원장이자 파시스트 전력을 가진 사마란치에게 평화상을 수여했다. 부정선거로 당선한 것이 뻔해 보이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유도복을 입고 자신의 스포츠맨 이미지를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올림픽에서의 ‘정치시위 금지’는 ‘정치적인 올림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라크 선수들이 반미 구호가 가득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뒀다고 생각해 보라. 1968년 멕시코올림픽 때 미국의 흑인 인종차별을 비난하는 의미의 ‘블랙파워 경례’를 했던 우승자 토미 스미스와 3위 입상자 존 카를로스는 올림픽에서 쫓겨났다. 물론, 새누리당 황우여 같은 자까지 나서서 박종우 선수 구제를 주장하는 것은 재수없다. 하지만, IOC가 박종우 선수를 징계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일이다.

안병철

폭염 속 소나기처럼 반가운 〈레프트21〉

2009년에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에도 〈레프트21〉 동지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군요. 늘 감사히 생각하면서도 제대로 감사 인사조차 전하지 못했습니다. 2012. 7. 26

서는 바깥 소식이 폭염 속 소나기처럼 반가운 접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옥중이지만 현 정권에 맞서 주민생, 평화통일을 위해 보탬이 되도록 투쟁하겠습니다. 〈레프트21〉 동지들의 건투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성동구치소에서 이희철 드림

만도·에스제이엠 침탈 — 고통전가 공세의 신호탄

민주노조운동의 반격을 건설하자

에스제이엠·만도에서 벌어진 용역 침탈과 직장폐쇄는 지배자들의 추잡한 공모이자, 씻을 수 없는 범죄다. 한낱 용역업체가 미쳐 날뛰는 것은 정부와 기업주들의 노조탄압 공세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은 올림피아드 휴가를 앞두고 전체 노동자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를 노렸다. 이들은 금융노조, 홍익대 청소·경비분회, 서희산업 노조 등에는 양보하거나 공격을 연기하면서, 금속노조를 집중적으로 두들겼다.

지배자들이 이토록 파렴치한 만행을 저지른 데에는 경제 위기 심화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 2008년 위기 이후 최근 2년간 유성기업·발레오만도·KEC 등에서 반복된 민주노조 파괴 공세가 이어졌다. 그때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저항을 짓밟고, 외주화와 구조조정 등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였다.

부품사 노조 패리기는 현대·기아차 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완성차 자본가들은 부품사 노조들의 투쟁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 “최근 완성차업체의 부품 수급이 ‘즉시 조달체계’로 돌아가면서”(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 부품사 노조들에 대한 관리·통제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 때문에 지난 수년간 에스제이엠·만도에서 유지돼 온 ‘원만한 노사관계’는 산산조각났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금속노조의 1·2차 파업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주력부대가 다시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허점도 나타내면서 저들은 유혈낭자한 도발의 틈을 발견한 듯하다.

금속노조 파업

현대·기아차 노조 지도부는 생산량 보전 압력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아차 소하리지회 지도부는 배신적으로 비정규직 확대에 합의했다. 현대위아를 비롯해 일부 부품사 노조들은 금속노조 지도부의 묵인하에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고 파업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단기적·부분적 시야에 갇혀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면서, 저들은 전국적 투쟁 전선을 흔들 수 있다고 봤을 것이다.

게다가 통합진보당 사태가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신감을 떨어뜨린 것도 저들을 고무했을 것이다. 용역 침탈 직전에 이석기·김재연 제명이 부결되면서, 혁신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노동자들은 더 큰 실망에 빠졌다. 지배자들은 이런 상황을 노동자 탄압에 이용하며 야비한 분열과 고립을 꾀한 듯하다. 에스제이엠과 만도가 모두 통합진보당 구당권과 친화적인 노조인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물론, 지배자들의 폭력 만행은 후폭풍

을 낳고 있다.

용역 침탈 직후 컨택터스의 실체가 폭로됐고, 정부와 경찰이 이를 비호했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레임덕에 시달리던 이명박과 ‘공천 현금’ 비리로 곤경에 빠진 박근혜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대응은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휴가가 끝나고 나서 본격 대응을 시작했지만 2~4시간 파업을 넘어서진 못하고 있고, 8월 11일 열린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반격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신호탄이 되지 못했다.

전국적 투쟁 전선이 강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GM대우 노조 지도부는 주간2교대 문제를 현대·기아차 노조에 맡겨 버리고 먼저 교섭을 잠정 합의했고, 기아차 노조 지도부도 현대차만 쳐다보며 투쟁 조직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현대차 노조 지도부가 심야노동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요구를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속에서 8월 말 민주노총 파업의 동력도 기대만큼 뚜렷하게 손에 잡히진 못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가 올 초부터 정치파업을 선언하고 일부 투쟁 확대를 시도한 것은 무척 잘한 일이다. 그러나 계획을 선언하는 것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전진시키며 투지와 자신감을 키워가는 것이다.

파업은 언제나 꺼내 휘두를 수 있는 주머니갑이 아니고, ‘정치파업’의 성공 여부는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신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올 초부터 언론노조·쌍용차·화물연대·금속노조 등 잇따른 투쟁을 서로 연결하며, 정치적 연대와 단결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투쟁의 가능성을 제시해 나가야 했다.

사실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은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실패하고, 특히 통합진보당이 위기를 겪으면서 힘이 커지지 못해 왔다.

민주당

에스제이엠·만도 침탈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을 확대하기보다 민주당의 국회 대응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 그러다 보면 민주당 수준에 우리의 요구나 투쟁 수준을 맞추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MBC 노조가 민주당의 ‘김재철 퇴진’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파업을 접은 후에도 탄압세례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민주당의 약속은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근 민주노총이 8월 말 투쟁 조직을 위한 지역별 농성에 돌입한 것처럼,



8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조운동을 겨냥한 정부·자본·용역의 합동 공세에 맞서 작업장을 뛰어넘는 단결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스스로의 투쟁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물론 여기에 진보의 정치적 대안을 재구성 하려는 노력이 결합돼야 한다.

특히 현장조합원들 사이에서 작업장을 뛰어넘는 계급적 단결을 추구할 좌파의 구실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노동자들이 자기 작업장을 넘어서,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의 호민관’으로 나서 전국적·정치적 문제들에 개입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 강조는 유효하다.

올해 노동자 투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GM대우의 부족한 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8월 말 민주노총의 투쟁에 최대한 많은 이들이 결집해 힘을 보여 주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계급세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반기 예고된 학교비정규직·공무원·쌍용차 투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설

“민주노총의 깃발을 걸고 에스제이엠을 지켜 주세요”

금속노조 에스제이엠지회 조합원들은 휴가도 반납한 채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다친 노동자들도 봉대를 동여매고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회사가 어렵다며 외주화해야 한다더니 용역강패들을 고용하는 데 56억 원을 썼어요. 이번 기회에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협박문자를 보냅니다. ‘한 가족’ 어찌구 하더니 본색을 드러낸 거죠” 하며 분노를 토했다.

조합원들은 이 공격이 주간2교대제를 내건 금속노조 파업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에스제이엠은 지난해 말부터 주간2교대를 시행했어요. 사측은 물량 조정을 쉽게 하려고 외주화와 구

조조정을 밀어붙였는데 노조가 반발하니까 아예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한 거죠. 직장폐쇄 하지마자 다시 주야맞교대로 돌아갔어요.

“에스제이엠에서 민주노조가 무력화하면, 주간2교대 정취 투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성차 동지들도 다 같이 싸워야 합니다.

“1987년부터 노조를 만들었고, 금속노조의 지침을 충실히 따라 온 에스제이엠에서 민주노조가 꺾이면 민주노총의 핵심인 금속노조 다른 사업장도 안심할 수 없을 겁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명운을 걸고 에스제이엠을 지켜내는 데 함께해야 해요.”

강철구



마르크스21

13호 2012년 봄/여름

가격: 16,000원

www.marx21.or.kr



특집 오늘의 세계 상황
경제 위기, 혁명, 그리고 전쟁에 관한 소문들
중국과 세계경제 위기
오늘날 중국의 현실

논쟁 경제 위기 분석과 대안
진정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경제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마르크스주의적 해설을 위하여
자본주의 생산의 실태: 앤드루 클리먼의 최근 논의 검토

쟁점
한국 복지국가 논의 지형과 좌파의 과제
한국 여성 노동의 현실과 투쟁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2. 1930년대의 대불황
서평
(6월 항쟁: 1987년 민주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장엄한 민중항쟁에 대한 탁월한 보고서